

전략연구 2011 - 09

#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호 · 신동호 · 임재영 · 김양중 · 이태호



# 발 간 사

충청남도는 2000년대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지역 내 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8.03%로 전국의 3.75%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서도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충남의 기업유치정책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치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이를 테면, 지역 내 고용창출, 지방세입 증대 등-는 여전히 의문시 된다. 더불어, 유치기업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지역 내 토착민과의 대립, 이전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유치는 민선 4기 충남 도정의 역점 사업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활발한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의 성장과 반드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여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충남으로 이전해 왔거나 유치된 기업의 지역 내 고용창출, 토착기업과의 산업연관, 전략산업의 집적화, 연구개발, 수출, 사회적 책임, 환경오염 등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고,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충남도정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2011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 연구요약

## 1. 필요성과 목적

충청남도는 수도권 기업의 유입 등으로 지역 수출액, 지역내 총생산(GRDP)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05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별 연평균 GR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전 산업에 대한 수치는 8.03%, 제조업에 대한 수치는 12.87%로 나타나 전국의 수치인 3.75%(전산업)와 4.73%(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제주도를 포함하는 16개 광역시도별로 계산된 연평균 성장률에서도 충남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단연 높게 나타난다. 충남 다음으로 경기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5.88%(전산업)와 7.93%(제조업)에 불과하여 충남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기업의 경우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고용창출에 그다지 큰 공헌을 하지 못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등과 같이 오히려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선 4기 도정에서는 기업의 유치에 가장 중점을 두었으며, 기업의 유치에 투자된 재원과 기업유치의 성과(유치된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실적에 치중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우선시하는 기업유치정책과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및 토착화의 유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의 민선 4기에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기업유치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기업유치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2. 주요 연구내용

###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유치기업에 대한 정의는 충남도로부터 이전보조금을 받고 도내로 이전해온 기업에 한정하며, 이들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분석은 고용창출, 산업연관, 그리고 연구개발 등에 한정하되, 고용창출과 산업연관에 대해서는 기여의 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기존에 도내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 혹은 이전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도내로 이전해 온 이전기업과의 차이를 통해 분석한다.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분석은 유치기업의 이전 전후 고용변화에 대한 다양한 회귀식의 추정을 이용하고, 산업연관효과에 대한 분석은 유치기업의 이전 전후 생산, 도내 업체로부터의 구매,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공급의 변화를 비교하고 도의 전략산업이나 이의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간 비교한다.

### (2) 분석결과

통상최소자승법에서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 전후 고용변화는 이전기업의 고용변화에 비해 평균적으로 13명~17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전보조금의 규모는 고용창출효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상최소자승법이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의 여러 특성들-도내로 이전해 오기 전의 고용, 이전해 온 지역과 연도, 제조업 여부, 본사를 제외한 공장만 이전해 온 경우(분공장, branch plant)-을 통제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개별 기업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한다. 하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더미변수가 모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추정이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전보조금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전보조금의 규모는 고용창출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변화를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간 그리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의 시점 간 변화-도내로의 이전 전후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격차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유치기업의 고용이 이전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83명만큼 컸으며 도내로의 이전 후에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모두 평균적으로 4명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유치기업의 고용증가는 이전기업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치기업의 이전에 따른 절대적 고용변화는 전체 고용과 상용직 고용 모두에 있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폭은 10%의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영(0)과 다르지 않아 유치기업이 도내로 이전한 후에 이의 고용이 이전 전의 고용에 비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 유치기업의 이전하기 전 고용규모에 의해 62개의 유치기업을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이들 집단 간 이전에 따른 고용변화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초기 고용이 60인 이하인 유치기업의 경우 전체 고용이 9.5명가량 증가하였고 상용직 고용은 8.9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 고용이 61인 이상 100인 이하인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에서는 전체 고용과 상용직 고용이 유사하게 대략 15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101인 이상의 초기 고용을 가지고 있던 유치기업은 이전에 따른 고용의 증가가 전체 고용과 상용직 고용에서 각각 2.4명과 1.2명으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가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0)과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는 표본에서 중간 규모의 초기 고용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유치기업을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와 공장만 이전한 경우로 구분하여 이전 전후 고용의 변화를 이 두 집단 간에 비교하면,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 전체 고용은 이전 전의 119.8명에서 이전 후의 134.7명으로 평균적으로 14.9명만큼 증가하였으며 상용직 고용의 경우 111.7명에서 123.9명으로 12.2명만큼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폭은 각각 5%와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0)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공장만 이전한 경우 전체 고용은 이전 전의 141.8명에서 이전 후의 145.4명으로 3.6명만큼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지 못한다. 유사하게, 상용직 고용 역시 이전 전후 고용이 평균적으로 4.8명만큼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외지에 본사를 둔 분공장의 유치는 해당

분공장이 지역경제와 연계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에 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

62개의 유치기업 가운데 이전 전후 생산액,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중간재 구매 비중,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중간재 공급비중 모두에 대해 유의한 응답을 한 업체는 49개에 해당한다. 이러한 49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물가의 상승이 고려된 실질 생산은 도내로 이전해 오기 전에 비해 이전해 온 후에 오히려 감소한 반면 도내 업체로부터의 구매비중이나 공급비중은 각각 5.2%p와 4.0%p 만큼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을 도내로 이전해 오기전의 명목 생산액 기준 25십억원 이하의 업체(24개)와 이를 초과하는 업체(25개)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생산규모가 작았던 업체들은 이전 전후 실질 생산액의 증가를 경험한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규모가 컸던 업체들은 실질 생산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에 구매비중이나 공급비중의 변화는 두 집단 모두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증가폭은 두 집단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을 전후로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기존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도내 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을 전후로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나 중간재 공급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도내 업체로부터의 수요의 부재와 도내 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가운데 충남의 전략산업-자동차·부품, 전자정보, 농축산바이오, 그리고 첨단문화-에 해당하는 업체수의 비중을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간 비교하면, 유치기업의 경우 48.8%가 전략산업에 해당하여 이전기업의 34.6%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그리고 첨단문화에서 유치기업의 비중이 이전기업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며, 단지 농축산바이오에서만 이전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추가적인 이전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기업유치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충남으로 이전해 온 기업의 이전 전후 고용의 증가는 기존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업의 그것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전보조금을 받고 도내로 이전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이전해 오기 전 종사자수가 100인 이하인 업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전후 고용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0)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적어도 단기에 있어 이전 후의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유치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한다.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이전 전후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사유 가운데 경기변동적 요인을 제외하고 지원자 부족, 지원자의 숙련도 혹은 경험 부족, 그리고 높은 임금을 지적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이나 전문 기술인력의 공급을 위한 기업 맞춤형 산학연관 합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공장 가설의 검증에 대한 결과는 기업의 유치가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를 포함함으로써 유치된 기업의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창출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함축한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 이후에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 혹은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증가는 유치기업의 초기 생산액 규모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치기업과 기존 도내 업체와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와 공급을 통한 연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도내 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유치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개별 시군의 산업집적과 집적된 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을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기업유치정책을 펴으로써 기업유치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의 기업유치정책 가운데 하나는 도의 전략산업이나 핵심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우선적 유치이며, 이를 위해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전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적 기업유치정책은 전략산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충남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과 관련하여 이와 연관된 기업의 유치에 중점을 두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도내 개별 시군의 기업경영관련 기반시설의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유치대상 기업과 입지대상 지역 간의 적합도를 높임으로써 유치기업과 해당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업유치정책 자체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결과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최근에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들 가운데 이전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수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며, 이는 이전보조금의 지원이 없이도 외지기업의 도내로의 이전이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보조금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이전보조금 이외의 사항-이를 테면, 충남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임대료) 혹은 도내의 저렴한 원자재 및 중간재-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는 이전보조금 위주의 기업유치정책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유치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는 유치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동반가족에 의한 지역 내 소비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출신지 기준 외지인의 비율은 국가산단에서 18.0%, 일반산단에서 35.5%,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41.5%로 이들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도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 외지에서 이전해 온 유치기업의 경우 가족과의 비동거 근로자 비율이 보다 높아 지역 내 소비증가의 효과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치기업의 종사자가 가족을 동반하여 도내에 이주하여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2개 유치기업 가운데 단지 13개 업체만이 계획입지(산업단지) 내로 이전을 했을 뿐 나머지 유치기업들은 개별입지로 이전하여 충청남도의 계획입지

유도방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난개발을 초래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정책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유치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으로 기반시설 확충, 운영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자금지원이나 판로확보도 후순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유치 혹은 이전기업의 경우 이전 후에 낮은 지역 내에서 경영상의 많은 애로사항을 경험하게 된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인력의 충원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맞춤형 기술교육사업, 취업박람회, 고용촉진훈련, 인턴사원제, 취업알선센터 등을 운영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은 도로의 혼잡이나 공해 혹은 소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인근 지역주민에게 야기하기 때문에 간혹 유치기업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초래한다.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의적인 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는 외부인과 외부기업이 배타적인 느낌을 갖지 않도록 외부자본과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자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친기업적 정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강법식·김덕모, 2006). 더불어, 유치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외지기업의 지역 내 유치 후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 내 현지토착화 되어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치 혹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DB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론 및 시사점

충남은 우리나라의 중위 입지(median location)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인접하고 지가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기업유치를 위한 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유치정책의 개선은 지역 내 고용창출, 지역 내 산업과의 연계강화, 지역 내에서의 기술혁신이나 수출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1. 연구의 내용 .....	3
2. 연구의 방법 .....	4
제 2 장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관련이론과 선행연구의 검토 .....	6
제 1 절 관련이론의 검토 .....	6
1. 외부유치기업의 지역연계 가설 .....	6
2. 분공장 가설 .....	7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9
1. 지역경제 활성화 .....	9
2. 지방세입 증대 효과의 미약 .....	9
3.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의 한계 .....	10
제 3 장 충남의 기업유치관련 정책과 유치실적 .....	12
제 1 절 충남의 기업유치관련 정책 .....	12
1. 기업유치 전략 .....	12
2. 중소기업지원 전략 .....	19
3. 기업유치를 위한 이전보조금 지원 실태 .....	20
제 2 절 충남의 기업유치 실적 .....	21
1. 연도별 기업유치 실적 .....	21
제 4 장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	24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	24
1. 고용창출 .....	24
2. 산업연관 .....	26
3. 지방세 수입 .....	34

4. 지역 내 소비지출 증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	35
5. 인구유입 .....	35
6. 집적의 경제 .....	36
7. 기술이전 .....	38
8.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39
9. 부정적 효과 .....	40
제 2 절 분석자료 .....	41
1.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	41
2. 설문조사 .....	48
제 3 절 분석결과 .....	60
1. 고용창출 .....	60
2. 산업연관 .....	76
3. 조세의 감면, 이전보조금 수취, 그리고 지방세 납부 .....	78
4. 인구유입 .....	80
5. 집적의 경제 .....	80
6.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	87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	89
8. 부정적 효과 .....	93
<b>제 5 장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b>	<b>96</b>
제 1 절 지역경제 기여도 증대 .....	96
1. 고용창출 .....	96
2. 산업연계 강화 .....	96
3. 선별적 기업유치 .....	97
4. 이전보조금 지원정책의 개선 .....	97
5. 근로자 가족의 동반이주 촉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	99
6.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과 병행하여 기업유치정책 추진 .....	99
7. 조세감면제도의 유연성 증대 .....	100
제 2 절 유치기업의 토착화 .....	101
1. 유치기업의 정책 수요 .....	101
2. 유치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	101
3. 지역주민과 이전기업 간 상생협력방안 모색 .....	102
4. 기업유치실적 관련 DB의 정확성 개선 .....	102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03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103
1. 연구결과의 요약 .....	10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04
<참고문헌> .....	105

# 표 목 차

<표 3-1>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14
<표 3-2> 신·증설기업 지원 .....	15
<표 3-3> 충청남도 이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16
<표 3-4> 충청남도 이전기업(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16
<표 3-5> 충청남도 이전기업(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17
<표 3-6> 외국인 투자 지원 중 입지지원 내용 .....	17
<표 3-7> 외국인 투자 지원 중 재정지원 내용 .....	18
<표 3-8> 연도별 이전보조금 지원 실적 .....	20
<표 3-9> 연도별 기업이전 현황 .....	21
<표 3-10> 도내 지자체별 기업유치 실적 .....	22
<표 3-11> 연도별 이전기업의 이전하기전 소재지 분포 .....	23
<표 4-1> 도내에서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대한 유발효과가 큰 산업 .....	34
<표 4-2> 충남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연관산업군 .....	38
<표 4-3> 연도별 규모별 이전여부별 사업체 .....	42
<표 4-4>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이전여부별 평균 종사자수 .....	43
<표 4-5> 종사상지위별 고용변화별 사업체수 .....	44
<표 4-6> 2009년 기준 대분류 산업별 이전여부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45
<표 4-7> 2009년 기준 행정구역별 이전여부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46
<표 4-8> 2009년 기준 유형별 이전여부별 사업체수 .....	47
<표 4-9> 이전기업의 2006년 소재지별 사업체수 및 고용 .....	48
<표 4-10> 연도별 이전기업의 이진후 소재지 분포 .....	49
<표 4-11> 이전기업의 이전유형에 따른 분포 .....	50
<표 4-12> 산업중분류 기준 이전기업의 분포 .....	51
<표 4-13> 종사자 기준 기업규모 .....	52
<표 4-14> 도내로 이전하기 이전의 소재지별 분포 .....	52
<표 4-15> 도내로 이전 후의 소재지별 분포 .....	53
<표 4-16> 이전기업의 설립연도에 따른 분포 .....	53
<표 4-17> 이전기업의 이전연도에 따른 분포 .....	54
<표 4-18> 이전기업의 이전사유에 따른 분포 .....	54
<표 4-19> 유치기업의 도내 입지별 분포 .....	56
<표 4-20> 산업중분류 기준 유치기업의 분포 .....	57



<표 4-21> 유치기업의 지정여부(중복지정 가능) .....	58
<표 4-22> 유치기업의 이전사유 .....	58
<표 4-23>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61
<표 4-24> 초기 고용이 5인 이하인 표본을 대상으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 한 회귀분석결과 .....	62
<표 4-25> 초기 고용이 6인 이상 50인 이하인 표본을 대상으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63
<표 4-26> 시군구-중분류 산업-초기 고용에서 이전기업과 가장 유사한 기존 기업만 을 대조군으로 .....	65
<표 4-27> 이전기업과 동일한 시군구-중분류 산업에 속하며 세세분류에 의한 산업, 조직유형, 사업체형태, 대표자의 성별에서 유사성이 가장 큰 기존 기업 가운데 초기 고용의 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존 기업과 이전기업 간 고용 의 변화에 대한 초기 고용의 규모별 분석결과 .....	67
<표 4-28>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고용의 변화 .....	69
<표 4-29> 유치기업의 이전에 따른 고용의 변화 .....	69
<표 4-30> 이전하기 전 고용규모에 의해 구분된 유치기업 집단 간 이전에 따른 고용 변화의 비교 .....	71
<표 4-31>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와 공장만 이전한 경우 간 유치기업 고용 변화의 비교 .....	72
<표 4-32> 이전기업과 유치기업 간 (상용직) 고용창출효과의 차이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	74
<표 4-33> 이전 후 연차별 평균 신규고용 .....	75
<표 4-34> 유치기업의 실질 생산액,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 구매비중,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나 중간재 공급비중의 이전 전후 변화 .....	77
<표 4-35>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연도별 지방세 납부실적 .....	79
<표 4-36>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출신지별 거주지별 임직원수 ...	80
<표 4-37> 이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특허출원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고용의 차이 .....	88
<표 4-38>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유치기업의 기술개발 전문 인력 (상시직 내부인력) 의 수(평균) 현황 .....	89
<표 4-39>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연도별 봉사활동 내용 .....	90
<표 4-40> 기업과 주민관의 관계에 대한 인식 .....	91
<표 4-41> 상생협력의 주체에 대한 인식 .....	91
<표 4-42> 상생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	92
<표 4-43>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여부에 대한 인식 .....	92

<표 4-44>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지원여부에 대한 인식 .....	93
<표 4-45>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연도별 조세감면과 보조금 수혜내역 .....	94
<표 4-46>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오수·폐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0년 기준) .....	94
<표 5-1> 유치기업 대상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01

# 그림 목차

<그림 1-1> 지역별 GRDP의 연평균 성장률 (% , 2000-2009년, 2005년 가격기준) .....	1
<그림 4-1> 산업연관표의 구조 .....	29
<그림 4-2> 충남 유치기업의 설립연대별 분포 .....	56
<그림 4-3> 제조업 내에서 전략산업의 비중(%) .....	81
<그림 4-4> 제조업 내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연관 산업의 비중(%) .....	81
<그림 4-5> 제조업 내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중(%) .....	82
<그림 4-6> 제조업 내에서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연관 산업의 비중(%) .....	82
<그림 4-7> 제조업 내에서 전자정보기기산업의 비중(%) .....	83
<그림 4-8> 제조업 내에서 전자정보기기산업에 대한 연관 산업의 비중(%) .....	83
<그림 4-9> 제조업 내에서 농축산바이오산업의 비중(%) .....	84
<그림 4-10> 제조업 내에서 농축산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관 산업의 비중(%) .....	84
<그림 4-11> 제조업 내에서 첨단문화산업의 비중(%) .....	85
<그림 4-12> 제조업 내에서 첨단문화산업에 대한 연관 산업의 비중(%) .....	85
<그림 4-13>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가운데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수 비중(%)의 차이 ...	86
<그림 4-14> 이전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별 분포(개소) .....	88



# 제 1 장 연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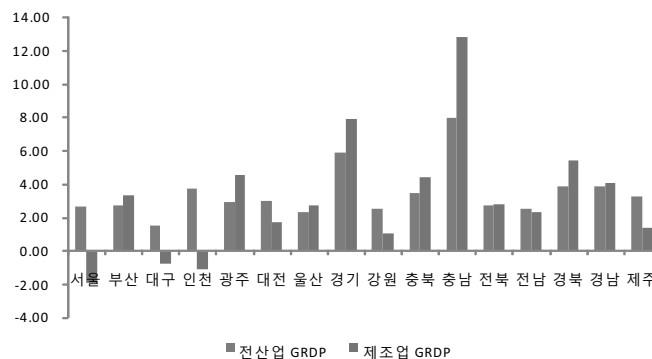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개별 지자체는 기업의 유치를 통한 고용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수도권 기업의 유입 등으로 지역 수출액, 지역 내 총생산(GRDP)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05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별 연평균 GR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전 산업의 수치는 8.03%이며 제조업의 수치는 12.87%로 나타나 전국의 수치인 3.75%(전 산업)와 4.73%(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제주도를 포함하는 16개 광역시도별로 계산된 연평균 성장률에서도 충남은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단연 높게 나타난다. 충남 다음으로 경기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5.88%(전 산업)와 7.93%(제조업)에 불과하여 충남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1> 지역별 GRDP의 연평균 성장률(% , 2000-2009년, 2005년 가격기준)



자료 : 충청도청, 내부자료, 각 년도

2000년대에 충남의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연평균 각각 4.20%와 4.51%만큼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수치인 1.41%와 0.66%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sup>1)</sup> 제조업 생산액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이 8.59%인데 반해, 충남의 수치는 14.38%로 전국에서 최상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기업의 경우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고용창출에 그다지 큰 공헌을 하지 못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등과 같이 오히려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선 4기 도정에서는 기업의 유치가 가장 중점을 두어 큰 성과를 이뤘으나, 이러한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에 투자된 재원과 기업유치의 성과-즉, 유치된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유치정책에 있어서도 실적에 치중한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유치정책의 효과분석과 더불어 유치 후 사후관리 및 토착화 방안의 도출을 통한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향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민선 4기에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기업유치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계를 평가하고, 민선 5기에서는 기업유치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용창출, 산업연관, 조세수입, 전략산업의 집적화 등의 측면에서 보다 다각적이며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유치정책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이러한 수치는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 1)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관한 실증분석에 앞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과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의 방법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다. 특히, 이론적 측면에서 외부유치기업의 지역연계 가설과 분공장(branch factory) 가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외부유치기업과 기존 기업 간 연계가능성과 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유치기업이 본사가 아닌 분공장인 경우를 포함하여 기업유치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의 관점을 정리한다. 더불어, 기업유치의 사례분석 혹은 실증분석을 포함하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비교한다.

#### 2) 충남의 기업유치정책의 개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기업유치정책과 함께 간접적인 기업유치정책으로서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개관한다. 또한 충남도로부터 제공된 연차별 이전기업보조금의 지급현황에 대한 분석과 유치기업의 연도별, 산업별, 지역별 분포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 3)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실증분석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실증분석은 최근에 충청남도로 유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창출, 도내 기존 기업들과의 산업연관, 수출의 증대, 기술개발활동, 지방세 납부, 세제감면 및 이전보조금 수혜, 환경오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더불어,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지인 고용, 근로자

가족의 도내 동반이주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을 추가한다. 유치기업과 더불어 충청 남도로 이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변화를 기존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업들의 고용변화와 비교하고, 이전후 연차별 신규고용에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치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2006년 자료와 2009년 자료, 이전기업과 유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그리고 도내에 입지해 있는 대기업 사례분석을 주로 이용한다.

#### 4) 기업유치 정책방향의 재정립을 위한 제언

실증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유치정책의 방향 재정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들을 도출한다. 특히, 기업의 양적 유치 전략에서 질적 유치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 단기적 직접 인센티브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 활동 지원 방안,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및 토착화 방안,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업유치 정책방향 도출, 그리고 제한적인 자원(산업용지 및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한다.

## 2. 연구의 방법

### 1) 문헌조사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에 관한 국내외 문헌의 검토와 더불어 지역경제 기여도의 항목-이를 테면, 고용창출, 산업연관, 지방세 납부, 지역내 연구개발활동 등에 관한 검토와 개별 항목의 분석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 2)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통계청의 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고용창출, 산업연



관, 집적의 경제 등에 관한 지역경제 기여도의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 3) 기업체 방문을 통한 심층인터뷰

정량적 분석에 추가하여 일부 유치(혹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한 기업 내 관련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 제 2 장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관련이론과 선행연구의 검토

### 제 1 절 관련이론의 검토

#### 1. 외부유치기업의 지역연계 가설

외부유치기업의 지역연계 가설은 발전모형(development model)과 의존모형(dependency model)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외부유치기업과 지역 내 기존 업체 간에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협력적이면서도 기술적인 형태로서, 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공급자와 긴밀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역화 수준은 비교적 높다. 지역 내 기존 업체에 기술과 전문성을 이전하고, 고도숙련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대한 투자확대 등 신산업 집적에 기반을 둔 성장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의존모형에서 외부유치기업은 비용최소화를 최고의 목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지역 내 기존 업체와의 하청관계와 같이 외부유치기업과 지역 내 기존 업체 간에 주로 불평등한 교역관계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연계의 지속성이 낮은 단기계약 위주로 지역 내 기존 업체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약한 유연성과 수직적 통제가 발생하고 지역화 수준 또한 비교적 낮다. 외부기업이 지역 내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지역 내에는 저 숙련 고용이 창출되고 분공장(branch plant) 가설과 마찬가지로 외부유치기업의 본사가 지역 외부에 있는 경우에 지역의 성장은 외부에 있는 (외부유치기업) 본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존하게 된다.

최근에 차미숙(2004)은 이러한 모형을 이용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 연계와 지역화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지역산업 연계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매 및 판매연계', '서비스 및 정보연계', '기업 간 협력 및 전략적 제휴연계', '지역고용 창출 및 기술이전 등 지역화 실태'로 구분해서 외국기업이 지역산업과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지역 내 연계수준이

낮고 해외의존경향이 높은 의존모형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은 해외 모기업과 비교적 강한 연계를 유지하며 지역 내 업체들과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교류하며, 생산협력에서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이나 기업 간 협력관계를 이루기보다는 기업 자체 내에서 해결하거나 일시적으로 주변 업체와 하청관계를 유지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이렇게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교류 없이 경영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업여건 개선으로 의존적 지역경제모형에서 초기단계의 발전적 지역연계모형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 내 특화·중점업종의 육성시책과 연계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선별적인 유치 및 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속성에 대한 종합분석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단계뿐만 아니라 투자 및 기업 활동 단계에서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의 마련이다.

## 2. 분공장 가설

분공장의 등장은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cycle)와 입지위계상 하향 여과(filtering down)를 통해 설명된다. 특정 제품이 수명 주기상 성숙기나 쇠퇴기에 있는 경우 제품의 생산과정은 이미 표준화되기 때문에 도입기나 성장기에 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생산요소-노동과 토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 만일 본사는 이전하지 않고 공장만 중소도시 혹은 비대도시지역(non-metropolitan area)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 분공장이 입지한 지역의 입장에서 분공장은 외부소유이며 의사결정이 외부의 본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과의 연계가 약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채환(1991)은 천안시를 사례로 공장의 지역입지, 특히 다공장기업(multi-plant firm)의 분공장이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에 입지함으로써 어떠한 지역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용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기존 분공장에 대한 연구 중에

국내 공장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여 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공장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장점으로는 모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고, 모기업이 갖고 있는 판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기업의 경험, 기재 등의 채신에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단점으로는 외부적인 지배로 인해 분공장 입지지역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본사의 의사에 따라 분공장이 입지한 지역이 아닌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경기 불황이나 모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역의 분공장이 우선적으로 정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분공장은 지역의 독립기업보다 지역경제에 통합되는 정도가 미약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하지만, 천안시 사례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주장이나 국외 사례의 분석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지역고용율과 함께 공장 당 평균고용인 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평가한 결과, 분공장이 단일공장에 비해서 지역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성 부분에서 임금과 노동조합의 존재여부, 이직율들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분공장의 고용안정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분공장 고용에 대한 외부통제, 즉 모기업으로부터의 간섭 측면을 살펴본 결과 사무직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분공장의 자율성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기존의 외부통제에 대한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서비스연계, 조세 연계 등 분공장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아닌 단지 고용연계만을 조사한 것으로서, 경제적 효과를 평가 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효과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연구는 상호대칭인자간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분석인자와 상호영향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분공장의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측면에서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1. 지역경제 활성화

외부기업의 유치는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고용창출 혹은 실업의 감소를 유발하며, 지역의 조세기반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안정 및 경제적인 자급자족을 가능케 하는 효과를 지닌다(강병수, 1997; 권선주 1997).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최근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내·외부 기업관계자 모두 외부기업유치의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산업구조의 개선이나 지방재정의 증대와 같은 효과 역시 클 것으로 응답하였다(강법식·김덕모, 2006).<sup>2)</sup> 특히, 변용환 외(2009)는 제조기업의 경우 고용창출, 생산, 기술이전, 관련 3차 산업의 성장 등을 통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 2. 지방세입 증대 효과의 미약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내 고용과 자본의 증가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증가시키지만, 이들은 지방세수 증대와 연계성이 매우 낮다. 자치단체의 기업유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정도인데, 전자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나 후자는 과세표준 현실화의 문제 등으로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이영희, 2008).<sup>3)</sup>

2) 이러한 결과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기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관리직 이상의 기업관계자(내부기업 96명, 외부기업 60명) 156명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25일부터 2005년 5월 9일까지 직접 실시한 면담 조사의 결과에 기초한다.

3) 이영희(2008)에 의하면, 파주시에서 2005년에 LG필립스 LCD공장의 유치시 산업단지 조성비용으로 약 515억원이 투자되고 기반시설(도로, 전력, LNG 등) 설치비용으로 28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면제되고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되어 지방세가 234억원만큼 감소된 반면 2008년에 예상되는 법인세는 210억원으로 지방세는 21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업유치에 소요된 비용에 비해 지방세수는 미미함을 지적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비중이 80%인 반면 지방세의 비중은 20%에 지나지 않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세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조차도 지방자치정부의 자율권이 거의 없어 지방세원의 발굴, 세율결정 등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비과세 내지는 감면조차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열악한 지방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최명희 외, 2006).

유치기업의 지방세입 증대효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발견하고 있다. 최명희 외(2006)는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이 지방세수 증대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가 극히 미미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96~2003년 간 총 조세납부액의 99.8%가 국세로 징수되었고 지방세수는 0.2%에 불과하였으며, 기업경영실적과 세목별 조세 납부액간의 탄력도 측정결과 기업유치의 이득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에 훨씬 더 크게 귀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진영환 외(1989)는 전남 여천지역에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섰으나 지방세 증가는 극히 미미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오연천(1988)에 의하면, 석유화학 업종이 특화된 여천은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세의 비율이 3.8%에 불과한 반면 섬유 및 조립금속 업종이 중심인 구미지역은 노동집약적 업종이 중심이어서 지방세 수입비율이 1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치산업 위주인 대기업이나 대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기업의 지방재정 기여도는 낮아지고,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 기여도는 높아지는 성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 3.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의 한계

이민원(2001)은 새로운 산업 혹은 대기업을 외부로부터 유치하더라도 지역 내에 관련부품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외지의 부품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제기한다. 따라서 외부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중소기업육성정책과 우수한 인력확보 및 기술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함을 주장한다.

최근에 Sonn and Lee(2011)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분공장이 현지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에 한계가 있음을 선행연구들에서의 고찰을 통해 요약한다. 캐나다 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분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지역 내 소비와 지역 내 공급업자로부터의 구매는 지역 내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고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승수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분공장은 외지에 있는 모기업의 이윤증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분공장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는 안정적이지 않다. 또한 연구개발활동은 주로 외지의 본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분공장은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에 수동적이며, 분공장이 전체 생산 공정에서 일부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품이나 원재료가 지역 내 기업이 아닌 외부에서 구매되고 이로 인해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제한적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 감면제도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의 고용과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편익이 조세 감면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상쇄한다는 전제하에 활용된다. 하지만, Milward and Newman(1989)은 조세 감면이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닐뿐더러 조세 감면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의 시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사하게, Spindler and Forrester(1993)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편익에 집착해 기업유치 등에 대한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 제 3 장 충남의 기업유치관련 정책과 유치실적

### 제 1 절 충남의 기업유치관련 정책

#### 1. 기업유치 전략<sup>4)</sup>

##### 1) 기본 방향

##### (1)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및 내포신도시 내 우량기업 중점 유치

도내 성장촉진지역(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을 포함하는 내륙·낙후지역 등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고용창출 등에서의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및 녹색성장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해 내포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2) 도 전략·핵심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

충남의 4대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와 핵심 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2차 전지에 해당하거나 연관된 기업의 유치를 통해 이들의 지역 내 집적화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3) 지식서비스 및 식품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유치로 지역 농산물 판로 확충 및 내수기반 강화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충하고 내수기반을 다지기 위해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유치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이면서 중간투입재로서의 기능을 갖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제조업을 포함하는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증대한다.

---

4) 본 절은 충남 도청의 기업지원과에서 제공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2) 전략적 추진방향

### (1)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구현을 위한 사람중심의 기업유치

사람중심의 기업유치는 사회적 취약계층-현지 여성·장애인 등-의 채용 시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복지형 종합 보육 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다.

### (2) 사람 중심, 양질의 맞춤형 기술인력 제공을 위한 「산·학·연·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이 맞춤형 기술 인력의 제공을 위해 취업관련 기관과의 산·학·연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학생)에서 지역 대학으로 다시 지역 기업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시스템」을 구축한다.

### (3) On/Off Line의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정보의 제공

이전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기업가들이 충청남도에 대한 투자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on/off line의 「산업입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4) 기업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기업의 입지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업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공장입지의 유도를 위한 지구 및 미니 산업단지를 지정한다.

### (5)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분위기 확산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충남」 이미지 구현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방안의 마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 (6) 이전기업의 토착화를 위한 「TOTAL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유치기업의 이전 후 3년간 자금, 판로(공동구매 포함), 수출, R&D 등에 있어 지원을 실시하고 「기업SOS 충남 넷」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단위 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

한다. 특히, 이전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신설·지원하고, 공공구매시 이전기업을 우선 배려하고, 이전기업의 제품에 대한 판매전을 개최하며, 이전기업의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 3) 기업유치 지원정책

#### (1)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은 크게 국비지원을 받는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및 신·증설기업 지원과 순수지방비로 지원하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의 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종업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지역 내 입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자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이다.

<표 3-1>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 인원이 10인 이상</li> <li>-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 선도 산업 또는 특화 업종으로</li> <li>- 신규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 인원이 상시 고용 인원의 10% 이상인 경우</li> </ul>	지역별	지원 유형	지원 범위(중소기업)	지원 비율
	수도권 인접 지역	설비 투자	설비투자 금액의 7%이내	국비 60%, 지방비 40% (도 30%, 시군 70%)
		교육 훈련	6개월×60만원 이내/1인	
	일반 지역	설비 투자	설비투자 금액의 10%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도 30%, 시군 70%)
		교육 훈련	6개월×60만원 이내/1인	
	성장 촉진 지역	설비 투자	설비투자 금액의 15%이내	국비 80%, 지방비 20% (도 30%, 시군 70%)
		교육 훈련	6개월×60만원 이내/1인	

신·증설기업 지원대상은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이 지역 내에서 증설하고자 신규 투자하는 경우 등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신·증설기업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수도권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  ○ 상시 고용 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으로 공장, 본사,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한 후 상시 고용 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중개·매 매업, 건설업 제외	지역별	지원 유형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미 지원		국비 60%, 지방비 40% (도 30%, 시군 70%)
		설비 투자	설비투자 금액 3% 이내 (전략·선도·특화 업종 5% 이내)		
		교육 훈련	6개월×60만원 이내/1인		
	일반 지역	입지	미 지 원		국비 70%, 지방비 30% (도 30%, 시군 70%)
		설비 투자	설비투자 금액 5% 이내 (전략·선도·특화 업종 7% 이내)		
		교육 훈련	6개월×60만원 이내/1인		
	성장 촉진 지역	입지	미 지원		국비 80%, 지방비 20% (도 30%, 시군 70%)
		설비 투자	설비투자 금액 10% 이내 (전략·선도·특화 업종 12% 이내)		
		교육 훈련	6개월×60만원 이내/1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나 1일 상시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 100억원까지의 예산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이며 첨단업종관련 공장이거나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가의 50%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비로 지원하되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금융 지원

금융지원은 창업자금, 경쟁력자금, 혁신형자금, 창업보육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융자를 포함한다.

<표 3-3> 충청남도 이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자금명	규모 (억원)	이율(%)	융자액 (억원)	상환기간	지원시기
창업자금	600	연 5.0%	15	• 시설 : 3년/5년 • 운전 : 1년/2년	수시
경쟁력자금	800	연 5.0%	12	3~5년	수시
혁신형자금	700	연 3.8~4.0%	5	2년/3년	수시
창업보육자금	100	연 5.0%	2.5	• 시설 : 2년/3년 • 운전 : 1년/2년	수시
기업회생자금	100	연 4.0%	5	1년/2년	수시
경영안정자금	2500	시중금리	3~5	2년/1년/일시	수시
소상공인자금	800	시중금리	0.2(창업) 0.2(개선)	2년/1년/일시	수시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보증금액의 1%)	8		수시

### (3) 세제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세제지원은 조세감면을 통해 이뤄지며, 그 대상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하는 외투기업이나 개발형 외투지역, 단지형 외투지역<sup>5)</sup>,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에 입지하는 외투기업을 포함한다.

<표 3-4> 충청남도 이전기업(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감면 대상	대상과목	조세감면 방법 감면기간	감면요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개발형 외투지역	국세	7년 감면	개발형 외투지역
	법인세	5년 100%	제조업 : 3천만불
	소득세	2년 50%	관광업 : 2천만불
	지방세		물류업 : 1천만불 R&D : 2백만불
단지형 외투지역	취득세	5년 감면	제조업 : 1천만불
경제자유구역	등록세	3년 100%	관광업 : 1천만불
자유무역지역	재산세		물류업 : 5백만불

5) 입주자격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며, 최저 투자금액이 신규투자시 입주하고자 하는 공장부지 가액의 2배 이상 외국인투자가 5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표 3-5> 충청남도 이전기업(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구분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경제자유구역
조세 지원	국 세	관 세	-	자본세 3년간 100%
		소득세	-	-
		법인세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 단, 천안, 아산, 당진은 5년, 2년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 과밀 억제 권역 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지 방 세	취득세	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 권역 외)	15년간 100%
		등록세	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 과밀 억제 권역 외)	15년간 100%
		재산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수도권 성장, 자연 권역 → 과밀 억제 권역 외)	15년간 100%
		종도세	-	15년간 100%

#### (4) 외국인 투자 지원

외국인 투자 지원은 입지지원, 재정지원, 그리고 현금지원을 통해 이뤄지며, 입지지원의 대상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새로운 공장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포함하며 지원한도는 외국인투자금액(FDI)의 50% 범위 내로 한정된다.

<표 3-6> 외국인 투자 지원 중 입지지원 내용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개발형 외투자지역	100%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 불 이상	단지형 외투자지역 100%
		일반산업단지 50%
	일반제조업 & 5백만 불 이상	단지형 외투자지역 75%
		일반산업단지 50%
분양가 차액보조	산업단지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 이하로 분양받고자 하는 차액보조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표 3-7> 외국인 투자 지원 중 재정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현금지원	1천만 불 이상 고도기술 등 투자자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공장 건축, 시설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현금으로 지원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10~100만원까지, 기업 당 최대 3억 원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고용 후 교육훈련 시 1인당 월 10~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대 3억 원 지원

현금지원의 대상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지원 금액은 외국인과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현금지원의 비율은 최소 FDI 금액의 5% 이상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국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을 합하여 계산하고 임대토지 제공시 정부토지매입비도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하며 FDI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5) 기타 지원

그 밖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으로는 기업 현지방문 상담, 이전부지 알선, 이전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공장설립 등 이전과 관련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하여 일괄 처리제 실시), 이전기업 조기정착 지원(이전기업의 자금, 판로, 인력확보 등에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소를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해외시장 개척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 기업지방이전 지원센터 운영(인·허가절차·공장 용지 안내, 자금융자/이전부지 매각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직간접적 정책들을 포함한다.

## 2. 중소기업지원 전략<sup>6)</sup>

### 1) 인력

기술 인프라 구축사업(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뿌리산업 6대 분야(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소성가공)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설계, 부품제작, 목업(Mock-up),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품질검사 등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이나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 2) 기술

초광역 기술사업화 연계 및 지역과 사업화 주체 간 사업화 연계는 관련 지역(강원, 경기, 대구, 전북, 충남) 내의 기업 또는 기술보유자로서 타인(기업,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필요로 하거나, 사업화 추진에 애로요인이 있는 기업 또는 기술보유자(연구개발기관, 개인 등)를 대상으로 연계와 알선, 그리고 과제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 3) 컨설팅/특허

지원기간("11.3.1~12.31)내 인증취득을 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가 대전·충청인 IT·SW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증(GS인증, IT·SW 관련 기타인증) 취득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GS인증은 3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IT·SW관련 기타인증은 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한다.

### 4) 판로/수출

수출기업 육성지원(수출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으며, 지난해까지 수출실적이 없거나 \$50만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경영안정화 및 일자리

---

6) 본 절은 충남 도청의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제공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창출도모를 위해 내수위주의 건전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병행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정책이다.

### 3. 기업유치를 위한 이전보조금 지원 실태

충청남도의 기업유치 이전보조금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충남의 이전보조금 지원 금액은 2005년 67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227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3-8> 연도별 이전보조금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13,406	13,999	17,334	23,434	51,563	42,800
국비	6,703	7,000	8,667	14,757	35,000	20,092
도비	3,064	3,499	4,333	4,337	8,280	10,213
시군비	3,639	3,500	4,334	4,340	8,283	12,495

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 제 2 절 충남의 기업유치 실적

### 1. 연도별 기업유치 실적

충남도청 기업지원과가 제공한 연도별 이전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06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5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전해 왔으며 특히 2007년에는 이전기업의 수가 1,004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충남으로 이전한 수도권기업의 수도 2006년 이래로 매년 200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은 도내의 시군 간 이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도외 지역의 기업이 도내로 이전한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된다.

<표 3-9> 연도별 기업이전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업체 수	4,402	548	495	1,004	855	817	683
수도권 이전기업	1,339	73	114	378	292	282	200

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표 3-10> 도내 지자체별 기업유치 실적

(단위 : 개소, 억원, 명, m<sup>2</sup>)

구분	업체수	수도권에서 이전	투자계획		
			투자액	고용	부지면적
계	683	200	29,581	18,883	5,198,203
천안시	161	60	5,227	5,454	1,073,195
공주시	35		621	712	282,683
보령시	13	2	854	357	177,748
아산시	140	42	5,453	4,175	1,057,272
서산시	48	35	12,437	3,681	599,721
논산시	44		1,672	675	316,715
계룡시	2		2	4	2,381
금산군	57	1	432	533	226,158
연기군	29	7	155	241	77,471
부여군	19	4	165	230	230,106
서천군	10		165	94	33,723
청양군	4		33	25	15,913
홍성군	17	1	250	338	112,018
예산군	5		180	159	56,956
태안군	5	1	44	26	12,382
당진군	94	47	1,891	2,179	923,761

출처 : 충남도청 기업지원과

주 : 2010년 12월말 현재

수도권으로부터 도내로의 이전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서산시를 위주로 이뤄졌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입지분포는 수도권에 대한 인접성과 기존 기업들의 집적에 기인함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도내 기업과 이전기업 간 산업연계나 집적의 경제를 고려할 때 북부권 위주의 이전기업 입지가 이점을 가질 수 있으나,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표 3-11> 연도별 이전기업의 이전하기전 소재지 분포

(단위 : 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84	53	50	35	13
부산	5	5	3	0	0
대구	1	4	2	1	1
인천	109	64	63	38	7
광주	2	1	1	1	1
대전	49	20	12	15	5
울산	3	2	2	1	2
경기	205	220	153	124	42
강원	0	2	2	0	0
충북	13	7	10	9	1
전북	0	3	1	2	1
전남	1	4		3	1
경북	8	4	3	6	3
경남	6	9	2	7	3
제주	0			0	0
미상	14	6	41	72	25
합계	500	404	345	314	105

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각 년도

주 : 2011년 수치는 7월말 기준

연도별로 기업이전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으로부터의 도내 이전이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연관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 제 4 장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 1. 고용창출

기업의 이전은 지역 내 고용의 창출을 유발하는데, 이는 기존 종사자들의 도내 이주와 기업의 이전 후 발생하는 신규고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 그 자체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전기업에게 제공되는 이전관련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등과 같은 지원정책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상대적 변화-이를 테면, 기존에 도내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의 고용의 변화 대비 이전기업의 고용의 변화-를 기여도 분석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전 혹은 유치기업의 이전 후 고용을 산업별 혹은 규모별로 비교하여 고용창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산업별 혹은 지리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기변동적 요인에 의해 분석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테면, 도내로 이전한 기업들 가운데 음식료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의류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 보다 평균적으로 고용이 적다고 해서 음식료제조업이 의류제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작다가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분석기간 동안에 음식료제조업이 의류제조업에 비해 경기가 좋지 않아 이 산업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증가 혹은 감소를 보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산업 혹은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산업별, 지역별, 혹은 산업-지역별 특유의 경기변동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 이전기업의 상대적 고용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전기업의 상대적 고용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계량기법 가운데 하나는 이중격차추정모형(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model)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정책의 대상(실험군, treatment group)이 나타내는 결과가 단순한 추세에 의한 것인

지 아니면 정책의 효과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의 대상과 특성이 유사한 비대상(대조군, control group)이 나타내는 결과와 비교하는 통계기법이다.

도내로 이전한 기업들을 실험 군으로 하고 기존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업들을 대조군으로 정의한 후에 이러한 두 집단의 이전 전후 고용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이전기업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E_{jt} = \beta_0 + \beta_1 Treat_j + \beta_2 After_t + \beta_3 (Treat_j \times After_t) + Char_j \zeta + v_{jt}$$

여기서,  $j$ 와  $t$ 는 각각 개별 기업과 연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E_{jt}$ 는 기업  $j$ 의 특정 시점  $t$ 년도의 고용을 나타내며,  $Treat_j$ 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충청남도로 이전해 온 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After_t$ 는 이전기업들이 충청남도로 이전해 온 이후의 시점인 2009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Char_j$ 는 분석의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 개별 기업의 특성들-이를 테면, 사업체 유형, 조직형태, 산업, 대표자 성별을 포함하는 매트릭스(matrix)에 해당하며,  $\zeta$ 는 이러한 특성들의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계수들을 포함하는 벡터(vector)를 나타낸다. 그리고  $v_{jt}$ 는 통상의 오차항(error term)을 나타낸다. 따라서 만일 이전기업이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기존에 충남에 입지해 있던 기업에 비해 효과가 크다면,  $Treat_j$ 과  $After_t$ 의 교차항인 ( $Treat_j \times After_t$ )의 계수( $\beta_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업의 도내로의 이전을 전후로 여러 해에 걸친 고용에 관한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보다 활용성이 높은 반면, 이전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특정 연도의 고용을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 분석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전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식을 추정할 수 있다 :

$$dE_j = \beta_0 + \beta_1 Move_j + Char_j \zeta + v_j$$

여기서, 종속변수인  $dE_j$ 는 기업  $j$ 의 분석기간 동안의 고용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경우 이중격차추정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와 이전여부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같으나 표본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내로의 이전후 신규 채용에 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내 고용창출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전기업의 산업별 분포와 산업연관표 상의 개별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계수를 분석함으로써 평균적인 고용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산업연관

### (1) 산업연관분석의 의의<sup>7)</sup>

한 국민경제 내에서의 각 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처분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연관관계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이 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간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순환과정은 소득순환과 산업간 생산물순환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순환은 소득의 발생으로부터 분배 및 처분과정 즉, 생산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국민소득이 이윤, 임금, 이자 등의 형태로 분배되어 소비재와 자본재의 구입이라는 처분활동을 거쳐, 다시 다음의 생산과정으로 환류 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에 반해 산업간 생산물 순환은 생산부문 상호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제외되나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국민소득분석이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수준을 표시하는 장점을 지녔다면, 산업연관분석은 구조적 측면에서 경제 내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 소득, 고용 등 각종 파급효과를

7)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한국은행(2009)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다. 경제적 효과의 분석과정에서 산업연관표는 대단히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분석수단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교과서와 논문, 그리고 연구보고서들에 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여기에서는 UN의 국민계정 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입각하여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 부문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 정책효과의 측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기술이나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거시경제모형에 의한 총량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때 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가 주어져 있어야 한다.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도구로서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Leontief(Wassily W. Leontief)에 의하여 창시되었다. Leontief는 미국경제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경제 표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표현함은 물론, 그 분석결과를 1936년에 “미국 경제 체계에서의 수량적인투입산출관계”(Quantitative Input 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는데, 동 논문이 산업연관분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그는 1919년 및 1929년의 미국경제에 관한 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1941년에 “미국 경제의 구조”(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29 : An Empirical Application of Equilibrium Analys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로 발표한 데 이어 1939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분석결과를 앞에서 언급한 책자의 제2판으로 발간하였다. 이 “미국경제의 구조 1919-1939”(Wassily W. Leontief,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 1939, 2nd edition revis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1)가 산업연관분석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다.

Leontief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철강생산 수준과 관련 고용문제를 예측함으로써 산업연관분석기법이 정책입안도구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 후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1947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한 이후, 영국(1948년표)과 일본(1951년표) 등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1958년 당시의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 및 1958년을 대상으로 작성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표는 기초 통계자료의 부족과 전자계산기의 이용제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때문에 그 내용이 미흡한 시산표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가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게 된 것은 한국은행이 1960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부터이다.

1960년 산업연관표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작성한 표로서, 1962년 3월 작성 작업에 착수하여 1년4개월간의 작업 끝에 완성, 1964년에 공표하였다. 이 표는 주요 물자의 수급정책 등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 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나, 작업기간의 장기화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초자료로 이용되지는 못하였고, 산업연관분석이 새로운 경제분석 방법으로 인식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개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및 제반 경제정책 입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1960년,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및 2005년 등 총 12회의 실측표와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93년, 1998년 및 2006년 등 총10회의 연장표를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2003년 9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을 요청받고 2003년 지역 산업연관표를 2004년 2월부터 약 3년간의 작업 끝에 2007년 3월 공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지역산업연관표이다.

## (2)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산업들이 생산 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표이다(김홍배, 2005)<sup>8)</sup>. 이러한 산업연관표는 행렬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 경제구조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산업연관표를 세로(열, column) 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데, 이를 투입구조라고 한다. 투입구조는 중간투입부문과 부가가치부문으로 구분되며, 그 합계를 총 투입액이라고 한다.

8) 김홍배(2005),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그림 4-1> 산업연관표의 구조

		내 생 부 문					외 생 부 문					(공제)	총 산출액		
		1	...	j	...	n	중간 수요계	소비	투자	수출	최종 수요계				
내 생 부 문	1	$X_{11}$	...	$X_{1j}$	...	$X_{1n}$	$W_1$	$C_1$	...	$I_1$	...	$E_1$	$Y_1$	$M_1$	$X_1$
	:	:	:	:	:	:	:	:	:	:	:	:	:	:	:
	i	$X_{i1}$	...	$X_{ij}$	...	$X_{in}$	$W_i$	$C_i$	...	$I_i$	...	$E_i$	$Y_i$	$M_i$	$X_i$
	:	:	:	:	:	:	:	:	:	:	:	:	:	:	:
	n	$X_{n1}$	...	$X_{nj}$	...	$X_{nn}$	$W_n$	$C_n$	...	$I_n$	...	$E_n$	$Y_n$	$M_n$	$X_n$
중 간 투 입 계		$U_1$	...	$U_j$	...	$U_n$									
외 생 부 문	피 용 자 보 수	$R_1$	...	$R_j$	...	$R_n$									
	영 업 잉 여	$S_1$	...	$S_j$	...	$S_n$									
	고 정 자 본 소 모	$D_1$	...	$D_j$	...	$D_n$									
	순 생 산 세	$T_1$	...	$T_j$	...	$T_n$									
	부 가 가 치 계	$V_1$	...	$V_j$	...	$V_n$									
총 투 입 액		$X_1$	...	$X_j$	...	$X_n$									

출처 : 한국은행(2009), 「2006년 산업연관표」

한편, 산업연관표를 가로(행, row) 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얼마나 팔렸는가를 나타내는데, 이를 배분구조라고 한다. 배분구조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중간수요부문과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재로 판매되는 최종수요부문으로 구분되며, 중간수요액과 최종수요액의 합계를 총수요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수요액에서 수입을 공제한 것을 총산출액이라고 하는데 총산출액은 총투입액과 항상 일치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text{총투입액} = \text{중간투입} + \text{부가가치 (투입구조)}$$

$$\text{총산출액} = \text{중간수요} + \text{최종수요} - \text{수입 (배분구조)}$$

$$\text{총수요} = \text{총공급}$$

$$\text{총투입액} = \text{총산출액}$$

산업연관표의 가로방향은  $i$  부문의 총산출액  $X_i$ 와 수입  $M_i$ 를 합한 총공급액  $(X_i + M_i)$ 은 중간수요인  $W_i (= \sum_{j=1}^n X_{ij})$  만큼 자부문 및 타부문의 생산을 위한 중간

재로 판매되고, 최종수요인  $Y_i (= C_i + I_i + E_i)$ 만큼 소비, 투자, 수출 등을 위한 최종재로 판매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세로방향은  $j$ 부문이  $X_{ij}$ 만큼의 생산을 위해 중간투입인  $U_j (= \sum_{i=1}^n X_{ij})$  만큼 자부문 및 타부문에서의 원재료 구입과 부가가치인  $V_j (= R_j + S_j + D_j + T_j)$ 만큼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연과표로부터 경제구조와 함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산업간의 구체적인 연관관계는 파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관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투입산출 계수(input-output coefficients) 또는 기술 계수(technical coefficients)  $a_{ij}$ 를 살펴보자.

$$a_{ij} = \frac{X_{ij}}{X_j}. \quad (1)$$

위와 같은 투입산출계수  $a_{ij}$ 를 구성요소로 하는 투입산출계수 행렬  $A$ 는 각 산업의 생산구조를 보임으로써 산업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산업간의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특정 부문의 최종수요(final demand) 변화가 야기 시키는 경제 내의 직접효과 및 간접적 효과의 합은 식(2)의 관계를 통해 도출된다. 식(1)의 관계에서부터 수요변화가 초래하는 직간접 효과의 도출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Miller and Blair(1985)<sup>9)</sup>를 포함한 국내외의 수 많은 연구자들이 기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sup>10)</sup>

$$\Delta X = (I - A)^{-1} \Delta F, \quad (2)$$

9) Miller and Blair(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0)  $(I + A + A^2 + A^3 + \dots)F = X$ ,  $X = \frac{1}{(I-A)}F$ .

여기서  $A$ 의 제곱근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 최종수요  $F$ 로 인한 무한대까지 반복되는 파급효과이며, 특히  $I$ 항은  $F$  자체의 변화만큼의 직접적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문의 식(2)에서와 같은 무한 등비급수 형태의 행렬식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I - A)^{-1} = [\lambda_{ij}],$$

$I$ : 단위행렬(identity matrix),

$[\lambda_{ij}]$ : 레온티에프의 역행렬(Leontief inverse matrix).

산업연관 분석에서 Leontief의 역행렬은 산업재화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가리키며, 이에 대해 생산과 부가가치, 소득, 그리고 고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 (3)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

여기에서는 각 산업이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과 갖는 연관성의 정도를 각 산업의 평균 승수 값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감응도계수와 영향력 계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감응도계수는 산업의 전방연계효과(forward linkage effect)의 상대적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며, 영향력 계수는 산업의 후방연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여기서 전방연계효과는 산업의 배분구조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산업  $i$ 의 전방연계효과는 산업  $i$ 의 제품이 다른 산업들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반면 후방연계효과란 산업  $j$ 의 성장이 산업  $j$ 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산업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의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감응도 계수는 모든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변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을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계수이다. 이와 같은 감응도 계수는 Leontief의 역행렬에서 해당 산업의 행의 합을 전산업의 행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V_i = \frac{\sum_j \lambda_{ij}}{\frac{1}{n} \sum_i \sum_j \lambda_{ij}} \quad (3)$$

$V_i$  : 산업  $i$ 의 감응도 계수.

위 식에 의해 계산된 감응도 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인 반면, 1보다 작은 작은 산업은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다른 산업 제품들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그 산업의 생산이 1단위 이상으로 증가하는 산업이며, 감응도 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생산이 1단위보다 작게 증가하는 산업이다.

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어떤 산업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계수이다. 이러한 영향력 계수는 Leontief의 역행렬에서 해당 산업의 열의 합을 전 산업의 평균 열의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U_j = \frac{\sum_i \lambda_{ij}}{\frac{1}{n} \sum_i \sum_j \lambda_{ij}} \quad (4)$$

$U_j$  : 산업  $j$ 의 영향력 계수.

앞의 식에 의해 계산된 영향력 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산업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가리키는 것이다. 반대로 영향력 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그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들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생산승수가 큰 산업일수록 그 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1보다 높게 나타난다).

#### (4) 지역의 선도산업 또는 핵심산업 선정과정에서 감응도 및 영향력 계수의 유용성

산업별 감응도계수와 영향력 계수는 정부가 투자해야 할 산업을 선택할 때 유용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국민경제나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하는 핵심산업(key industries)은 Hirshman(1958<sup>11</sup>)이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산업은 산업간 연관관계가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강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은 바로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큰 산업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모두가 1보다 큰 산업의 경우, 그 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들의 성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다른 산업들이 성장할 때 산업의 성장을 유도받기도 하는 산업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투자가 집중될 때, 투자의 효과를 경제 내에서 크게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내에 만일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이 없을 경우, 정부는 Hirshman이 제안한 것과 같이 감응도 계수보다는 영향력 계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대상의 산업을 선택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산업의 감응도계수나 영향력 계수는 개별 산업의 상대적 연관성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만, 엄밀히 말해 이들은 산업의 연관성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Laumas(1975)<sup>12</sup>)가 지적하였듯이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는 평균개념에서 산술적으로 측정된 계수이기 때문이다. 즉, 이 두 계수 값들은 일부 산업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irshman 역시 경제 내 산업의 투입구조와 배분구조가 소수의 특정 산업에 의존하거나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위험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예로, 경제가 일부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대상 핵심 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경제전체의 위축이 명약관화하다 할 수 있다.

#### (5) 충남에서의 산업연관에 의한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유발효과

이전기업들은 자체 고용이나 지방세 납부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이들이 도내의 기업들과 산업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들

11) Hirshman, A. O.,(1958), *An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2) Laumas, P. S.,(1975), "Kwy sectors in some underdeveloped countries," *Kyklos*, vol. 28.

의 도내로의 이전은 도내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생산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전기업의 이러한 산업연관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한다. 첫 번째 방법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충남에서 생산유발효과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들을 구분한 후에 이전기업들이 이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업체로부터의 중간재 구입액이나 도내 업체들에게 공급한 중간재 공급액을 직접 설문조사하여 이전기업들 가운데 산업별로 비교함으로써 도내 업체들과의 연관을 산업들 간에 상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산업연관표가 2005년 자료라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른다. 이에 반해, 두 번째 방법은 개별 이전기업들이 중간재에 대한 도내 조달과 공급을 설문으로 응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표 4-1> 도내에서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대한 유발효과가 큰 산업

생산		부가가치		고용	
산업	승수	산업	승수	산업	승수
합성고무	2.94435	임산물	0.87726	철도운송	0.78035
석유화학기초제품	2.6124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87072	교육서비스	0.73985
합성수지	2.56844	버	0.86972	연구기관	0.68203
가죽 및 모피	2.48752	교육서비스	0.86911	사회복지사업	0.67825
화학섬유	2.39929	기타 식용작물	0.86685	위생서비스	0.56453

출처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7

### 3. 지방세 수입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소득세를 포함하는

내국세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도세와 해당 시·군세를 세분될 수 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는 반면,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포함한다. 도세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시에 발생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시점에 주로 발생한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개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최근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으며, 개별 지자체의 내생적인 성장발전을 꾀하기 위한 가용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확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역시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지역 내 소비지출 증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유치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도내 소비지출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이나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이용해 개별 노동자의 특성이 통제된 산업별 규모별 평균 임금을 추정한 후에 이를 유치기업에 적용하여 임금소득을 추정하고,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이용해 임금수준별 소비성향 혹은 소비계수를 추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 5. 인구유입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개별 지자체의 입장에서조차 감소하는 지역 내 인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분석결과들은 저출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도내 유치를 통해 이에 종사하는 도외 거주 노동자들과 이들의 가족이 도내로 이주함으로써, 인

구유입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의 도내 유입효과에 대한 분석은 통계청의 「국내인 구이동통계」를 이용해 직업으로 인한 지역 간 이주(주민등록상의 전입과 전출)와 가족의 동반여부를 고려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주사유가 직업인 경우에도 이 직을 통한 이주와 근무하는 기업의 이전을 통한 이주 간에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와 해석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 6. 집적의 경제

기업유치는 기업들의 지리적 집중을 가속화하여 군집을 이루는 기업들에게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Marshall(1890)의 주장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집적의 경제는 지식의 파급, 노동시장의 풀링(pooling), 중간재 공급자의 공유를 통해 발생한다. 지식의 파급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게 입지한 상이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비공식적인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을 통해 생산기술이나 공정 혹은 신제품 등에 관한 암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이 기업들 간에 전파되어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풀링에 의한 효과는,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에서 개별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에 따라 기업들 간 노동의 이동이 보다 용이하고 기업과 노동자 사이 보다 나은 매칭(matching)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여 기업의 기대이윤이 높아진다.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이 업체의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낮은 가격에 이들 기업에 중간재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집적지 내 기업들에게 편익이 발생한다.<sup>13)</sup>

집적의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은 노동생산성, 고용성장, 기업의 입지결정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는데, 많은 선행연구는 기업들의 지리적 군집-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 혹은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을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

---

13) 물론 주어진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군집하는 경우 노동의 풀링에 의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기업들 간 경쟁의 심화로 숙련된 노동에 대한 기업들 간 약탈(labor poaching)의 가능성이 존재한다(Combes and Duranton, 2006).



되고, 고용의 보다 빠른 성장이 발생하며, 보다 많은 신생기업의 입지결정이 이뤄짐을 보여준다.<sup>14)</sup>

최근에 Lee et al.(2010)은, 우리나라의 자료(제조업)를 이용해, 기업들의 지리적 군집이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집적의 경제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지역-산업 내 군집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화경제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탄력성이 0.02~0.03에 달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계량적 오류-이를테면, 모형이 유의한 설명변수를 포함하지 못하거나 오차항이 내생성을 지님으로 인한 추정상의 오차-에 의한 허구적(spurious) 결과의 가능성이 낮음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따라서 유치기업이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는 집적의 경제를 통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의 전략산업은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첨단문화산업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도외 지역에서 도내로 유입되는 경우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전략산업에 속하는 도내 업체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유치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한 측면이 된다. 특히, 전략산업은 첨단업의 신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 집적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함을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

1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Duranton and Puga(2003)와 Rosenthal and Strange(2003)를 참조할 수 있다.

<표 4-2> 충남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연관산업군

전략산업	특화산업	연관산업군
전자정보기기산업	디스플레이부품소재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전자정보 소재,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부품 및 소재, 전자정보기기 구동용 부품
	차세대 소자 제조장비	전자정보기기 제조용 기계
자동차·부품산업	자동차 전장	내외장 부품소재, 공기조화 및 압축기, 차량용 전기장치
	자동차 의장 및 편의부품	시트모듈 및 세시분야
농축산바이오산업	농산자원가공	식품(건강기능, 발효, 식품첨가물 등), 동물사료(첨가제, 동물의약), 생물체제(화장품, 생물의약품)
	육·유가공	농축산 융합소재, 축산가공 소재, 농산가공 소재
	친환경바이오	바이오 연료, 미생물체제(클린환경 기타)
첨단문화산업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이러닝, 영상, 전자출판, 문화유산
	어플리케이션	전자정보기기(셋탑박스, PDA, 게임콘솔 등)

출처 : 황정현 외, 충남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지 조성계획, 2010

이처럼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유치를 통한 직접적인 집적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와 연관된 산업의 도내로의 이전 또한 도내의 기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Holmes(1999)는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군집하는 경우 이들 개별 기업의 지역 내 중간재 조달이 증가(vertical disintegration)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일부 연구들은 이러한 집적의 경제가 재화의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 7. 기술이전

외부기업이 도내로 이전해 옴으로 인해, 기존의 도내 기업들이 얻게 되는 여러 이득들 가운데 하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기술의 이전이다. 외부로부터 도내로 이전한 기업이 대기업이거나 기술혁신형 기업인 경우, 이들로부터 기존 도내에 입지해 있는 업체로의 기술이전이 그 외의 경우에 비해 보다 활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은 기업 내부의 상당한 자원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자체의 연구개발활동이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 공공부문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에서 곧바로 실용화할 수 있는 응용기술이 아닌, 원천기술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전기업에 의한 기술이전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대기업의 경우 도내에 있는 많은 업체들과 부품의 공급을 통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품질의 개선은 이들 협력업체에 의해 공급되는 부품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들 가운데 활발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도내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의 일부는 이러한 이전기업으로부터 생산 공정이나 제품 등에 있어 기술혁신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거나 모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

## 8.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오늘날 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기업의 활동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된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4단계로 구분되는데 제1단계는 경제적인 책임으로 이윤극대화과 고용창출 등이다.<sup>15)</sup> 제2단계는 법적인 책임으로,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의 납부, 소비자 권익의 보호 등이고, 제3단계는 윤리적인 책임으로, 환경·윤리 경영, 제품 안전, 여성·현지인·소수 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을 포함하며, 마지막 제4단계는 자선적인 책임으로, 사회공헌활동 또는 자선·교육·문화·체육 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된 활동들이 이전기업에 의해 지역 내에서 이뤄질 경우, 이는 이전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긍정적 기여에 해당한다. 특히, 제4단계의 자선적인 책임의 경우 비록 경제적 측면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낮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15) 보다 자세한 정의는 시사경제용어사전 참조.

## 9. 부정적 효과

### 1)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금)의 기회비용

일부 기업유치의 경우 조세 감면이나 지원금의 제공이 이뤄지며, 이는 도의 가용예산이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회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정책의 효과에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만일 도내 유치기업이 한계기업이거나 단순히 지원금의 수혜 혹은 공장부지의 매매를 통한 투기성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들의 유치는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지원(금) 대비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2) 환경오염

유치기업들 가운데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대기나 수질 등에 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의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오염원 발생의 정도는 제조업 내 세부 산업별로 유형화될 수도 있겠으나 일부 개별 기업은 이러한 오·폐수 및 공해에 대해 자체 처리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유형화가 불가능하여 환경오염을 통한 기업유치의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 3) 혼잡비용

기업의 유치는 지역 내 지대의 상승이나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여 기존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업들에게 일종의 혼잡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sup>16)</sup> 더불어, 유치기업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소음과 대기오염, 교통체증과 같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유치기업 인근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

16) 이와 같은 혼잡비용은 상대적인 것으로써 지역 내 지주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혼잡비용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횡재(windfall)로 작용할 수 있다.

## 제 2 절 분석자료

### 1.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이전기업을 도내 이전을 전후로 고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는 종사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체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분석에 포함될 수 있는 것 또한 큰 이점에 해당한다.<sup>17)</sup>

이 자료는 매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은 기준 연도의 다음 해 6월과 7월초 사이에 이뤄지며, 개별 사업체의 고유번호, 동·읍·면까지의 주소, 세세분류에 의한 산업,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창업년도와 창업월, 대표자성별, 종사상 지위별-성별 종사자수를 포함하고 있다.<sup>18)</sup>

본 연구에서는 2006년과 2009년의 자료를 이용해,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도내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도내에 계속적으로 입지해 있던 기업과의 상대적 고용변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 이들 이전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도내 유입을 통한 산업연관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시점을 기준으로 도내로 이전한 기업과 도내에 지속적으로 입지해 있는 기업의 구분이 필요하며, 이는 개별 사업체의 고유번호를 이용해 2006년과 2009년의 자료를 통합한 후에 개별 사업체의 2006년 주소와 2009년의 주소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2006년의 자료에 포함된 사업체는 3,143,582개인 반면 2009년의 자료에 포함된 사업체는 3,293,558개이며 이 가운데 162,430개의 사업체는 2010년 1월과 5월 사이에 폐업 등의 이유로 고유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시점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사업체(기존 기업)는 88,785개이고, 2006년에는

---

17) 사업체라 함은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를 지칭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는 이러한 개별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와 기업 간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18) 개별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통계청의 사전승인 후에 통계청 내에서의 이용만이 가능하다.

충남 이외의 지역에 입지해 있었으나 2009년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체(이전기업)는 236개로 확인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이들의 종사자수에 의한 분포를 보면, 기존 기업의 86.7%가 5인 이하의 사업체인 반면 이전기업의 36.0%가 5인 이하의 사업체이고 54.7%가 6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업체에 해당한다. 2006년을 기준으로, 기존 기업의 경우 이러한 종사자수에 의해 규모별 분포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이전기업은 2006년 대비 2009년에 5인 이하의 사업체와 201인 이상의 사업체 비중이 감소하였고 그 외의 규모별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 연도별 규모별 이전여부별 사업체

(단위: 개소)

종사자수에 의한 규모	2006년 사업체수		2009년 사업체수	
	기존 기업	이전기업	기존 기업	이전기업
5인 이하	76,838 (86.54)	101 (42.80)	76,982 (86.71)	85 (36.02)
6~50인	10,776 (12.14)	118 (50.00)	10,556 (11.89)	129 (54.66)
51~100인	728 (0.82)	9 (3.81)	751 (0.85)	12 (5.08)
101~200인	272 (0.31)	6 (2.54)	307 (0.35)	9 (3.81)
201인 이상	171 (0.19)	2 (0.85)	189 (0.21)	1 (0.4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내며, 두 연도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존 기업의 수는 88,785개소이고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한 기업의 수는 236개소임

기존 기업과 이전기업의 두 시점 간 고용의 변화를 보면, 기존 기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수가 2006년에 5.512명에서 2009년에 5.612명으로 고용이 평균적으로 0.10명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sup>19)</sup> 반면, 이전기업의 경우 도내로 이전하기 전에는 평균적으

19) 전체 고용이라 함은 상용종사자(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임시종사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며 일일종사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자영업주(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 무급종사자를 포함한다.

로 18,559명을 고용하였으며 도내로 이전한 후에는 평균적으로 19,839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이 1.28명 만큼 증가하여 기존 기업의 고용변화에 비해 평균적으로 1.18명만큼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상용직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두 집단 간 고용변화의 차이는 전체 고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더 큼을 볼 수 있다.

<표 4-4>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이전여부별 평균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2006		2009		변화	
	전체 고용	상용직	전체 고용	상용직	전체 고용	상용직
기존 기업	5,512	3,754	5,612	3,808	0.100	0.055
이전 기업	18,559	16,441	19,839	17,729	1.280	1.28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주 :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하며, 두 연도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존 기업의 수는 88,785개이고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한 기업의 수는 236개임

두 시점 간 고용변화별 사업체수 비중을 보면, 기존 기업의 경우 전체 고용을 기준으로 고용이 증가한 사업체수의 비중은 21.9%인 반면 감소한 사업체수의 비중은 25.7%로 이 기간 동안 고용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음을 볼 수 있다. 전체 고용이 아닌 상용직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소한 사업체의 비중은 17.0%로 증가한 사업체의 비중(13.4%)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전기업의 경우 전체 고용을 기준으로 고용이 증가한 업체의 비중은 47.5%로 감소한 업체의 비중(3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며, 상용직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면 감소한 업체의 비중이 30.1%로 전체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낮아 감소 대비 증가의 경우가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4-5> 종사상지위별 고용변화별 사업체수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고용 기준			상용직 종사자 기준		
	증가	불변	감소	증가	불변	감소
기존 기업	19,450 (21.91)	46,530 (52.41)	22,805 (25.69)	11,936 (13.44)	61,789 (69.59)	15,060 (16.96)
이전기업	112 (47.46)	41 (17.37)	83 (35.17)	112 (47.46)	53 (22.46)	71 (30.0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내며,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하고, 두 연도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존 기업의 수는 88,785개이고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이전한 기업의 수는 236개임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전기업의 대분류 산업별 분포를 보면, 236개의 사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136개(57.6%) 업체가 제조업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에 26개(11.0%) 업체, 건설업에 23개(9.7%) 업체,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11개(4.7%) 업체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수가 아닌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전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78.6%, 상용직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83.0%까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고용이 전체 고용을 기준으로 5%, 상용직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4.2%로 높아짐을 볼 수 있다.<sup>20)</sup>

20) 88,785개의 기존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6> 2009년 기준 대분류 산업별 이전여부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개소, 명)

대분류 산업	기존 기업			이전기업		
	사업체수	전체고용	상용직	사업체수	전체고용	상용직
농업, 임업 및 어업	168	2,270	1,675	-	-	-
광업	80	728	606	-	-	-
제조업	8,894	166,910	149,308	136	3,681	3,47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1	4,659	4,522	-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5	2,821	2,519	-	-	-
건설업	2,410	19,916	12,600	23	205	165
도매 및 소매업	24,684	59,011	16,568	26	243	189
운수업	6,274	19,293	11,528	1	45	45
숙박 및 음식점업	18,000	43,826	8,514	8	19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07	5,448	4,357	2	26	26
금융 및 보험업	1,186	15,149	10,598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96	7,081	4,247	9	126	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45	7,676	6,110	9	233	17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55	6,133	4,423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83	29,863	25,552	-	-	-
교육 서비스업	3,804	49,422	38,197	3	47	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46	27,034	22,944	8	33	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5	7,182	2,645	11	24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652	23,851	11,216	-	-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주 :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하고, 두 연도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존 기업의 수는 88,785개이고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한 기업의 수는 236개임

이전기업의 지리적 분포(행정구역별 분포)를 200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36개의 이전기업 가운데 48개(20.3%) 업체가 아산시로, 45개(19.1%) 업체가 천안시 서북구로, 25개(10.6%) 업체가 당진군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러한 순위는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반면 기존 기업의 지리적 분포는 사업체수 기준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의 순이며, 상용직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전기업의 입지분포가 기존 기업의 분포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7> 2009년 기준 행정구역별 이전여부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행정구역	기존 기업			이전기업		
	사업체수	전체 고용	상용직	사업체수	전체 고용	상용직
천안시 동남구	10,222	58,150	37,917	13	252	241
천안시 서북구	10,650	87,647	64,677	45	1,073	913
공주시	5,835	28,321	17,671	11	295	218
보령시	5,639	23,043	13,325	4	327	306
아산시	7,981	79,032	64,996	48	1,178	1,087
서산시	6,650	35,120	23,101	5	34	26
논산시	6,688	28,440	16,743	18	234	215
계룡시	950	4,895	2,928	12	140	122
금산군	3,535	16,014	10,397	18	170	156
연기군	3,517	20,307	15,080	12	84	66
부여군	3,619	14,658	8,318	2	8	4
서천군	3,506	14,585	8,291	5	22	17
청양군	1,790	7,610	4,770	2	107	105
홍성군	4,584	19,260	10,830	5	80	74
예산군	4,461	18,110	11,420	7	65	64
태안군	3,628	13,759	7,217	4	31	30
당진군	5,530	29,322	20,448	25	582	54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주 :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하고,

두 연도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존 기업의 수는 88,785개이고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한 기업의 수는 236개임

이전기업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대표자가 남성인 경우가 86.9%로 매우 높았으며, 조직형태별로는 회사법인(58.1%)과 개인 사업체(40.7%)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236개의 이전기업 가운데 191개(80.9%) 업체가 단독 사업체에 해당하고, 26개

(11.0%) 업체가 본사 혹은 본점에 해당하며, 나머지 19개(8.1%) 업체는 공장, 지사 혹은 지점, 영업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1)</sup>

<표 4-8> 2009년 기준 유형별 이전여부별 사업체수

(단위 : 개소, %)

구분	기존 기업		이전기업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b>대표자 성별</b>				
남성	56,746	63.91	205	86.86
여성	32,039	36.09	31	13.14
<b>조직형태</b>				
개인 사업체	72,085	81.19	96	40.68
회사법인	6,617	7.45	137	58.05
회사외 법인	2,788	3.14	1	0.42
비법인 단체	4,622	5.21	1	0.42
국가, 지방자치단체	2,673	3.01	1	0.42
<b>사업체 구분</b>				
단독 사업체	84,617	95.31	191	80.93
본사, 본점	868	0.98	26	11.02
공장, 지사(점), 영업소	3,300	3.72	19	8.0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주 : 두 연도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존 기업의 수는 88,785개이고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한 기업의 수는 236개임

이전기업이 도내로 이전해 오기 이전인 2006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09개(46.2%) 업체, 대전시에서 54개(22.9%) 업체, 서울시에서 19개(8.1%) 업체, 인천시에서 18개(7.6%), 충청도에서 11개(4.7%) 업체 등의 순으로 많은 사업체들이 이전해 온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도내로의 이전이 상대적으로 빈번했음을 볼 수 있다.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경기, 대전, 인천, 충북, 서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사업체수에 의한 분포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21) 개인 사업체라 함은 개인이 소유 및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포함하고, 단독 사업체는 다른 장소에 본사, 본점 또는 공장, 지점 등이 없는 1기업 1사업체를 지칭한다.

<표 4-9> 이전기업의 2006년 소재지별 사업체수 및 고용

(단위 : 개소, 명)

지역	사업체수	전체 고용	상용직	지역	사업체수	전체 고용	상용직
서울	19	103	80	강원	4	46	24
부산	1	3	3	충북	11	171	158
대구	3	28	27	전북	8	45	23
인천	18	523	508	전남	4	17	15
대전	54	773	682	경북	3	5	2
울산	1	1	-	경남	1	14	4
경기	109	2,651	2,354	합계	23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 2. 설문조사

### 1) 도내로의 이전기업

#### (1) 설문조사의 개요

통계청의 자료가 고용창출효과나 산업연관 등에 국한된 제한적인 분석만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5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전후 고용의 변화, 신규채용, 생산액, 수출액, 연구개발, 오·폐수 배출 및 처리 등에 관한 분석을 추가한다.

<표 4-10> 연도별 이전기업의 이전후 소재지 분포

(단위: 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천안	88	61	71	74	10
공주	1	8	5	1	3
보령	6	41	4	3	2
아산	35	59	49	49	10
서산	12	36	15	46	14
논산	18	10	21	2	1
계룡	5	7	1		3
금산	28	10	1	41	1
연기	13	4	10	33	15
부여	5	0	1	7	4
서천	1	5	0	1	
청양	6	3	2		1
홍성	11	15	4	7	4
예산	33	31	29	1	5
태안	1	0	0	1	0
당진	237	114	132	58	32
합계	500	404	345	324	105

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각 년도

이러한 자료는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에서 제공한 이전기업 목록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까지 조사원이 이전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전기업의 이전후 고용과 이전후 연차별 신규고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에 이전한 기업이 아닌 2007년에 충남으로 이전해 온 500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이 실제로 이전해 오지 않았거나 정보(업체명 혹은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아 설문조사는 대략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188개 이전업체가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 (2) 표본의 분포

설문조사에 포함된 표본의 분포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188개의 기업들 가운데

60개(65.2%)가 기술혁신형 기업에, 54개(58.7%)가 벤처기업에, 그리고 5개(5.4%)가 경영 혁신형 기업에 해당한다. 이전 연도별 분포를 보면, 2008년에 이전한 기업의 수가 35개 (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09년(20개), 2007년(18개), 2006년(11개), 2005년(8개)의 순으로 많은 수의 표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표본에서 65개(70.7%) 업체가 본사와 함께 이전하였으며, 공장만 이전한 경우도 24개(26.1%) 업체에 달한다.

<표 4-11> 이전기업의 이전유형에 따른 분포

(단위 : 개소, %)

이전유형	본사와 공장 함께 이전	본사만 이전	공장만 이전	그 외
사업체수	110	3	73	2
비율	58.51	1.6	38.83	1.06

<표 4-12> 산업중분류 기준 이전기업의 분포

(단위 : 개소, %)

산업분류	사업체수	비율	산업분류	사업체수	비율
농업	1	0.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16.5
식료품제조업	11	5.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9.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0	5.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2.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0.5	가구 제조업	2	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	0.5	기타 제품 제조업	1	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1.1	분류외 기타 제조업	1	0.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	5.3	수도사업	1	0.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0.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	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5.9	전문직별 공사업	3	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4.8	도매 및 상품중개업	1	0.5
1차 금속 제조업	16	8.5	출판업	1	0.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13.8	연구개발업	1	0.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	3.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	0.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2.1	합계	188	100.0
전기장비 제조업	10	5.3			

종사자 기준 기업규모별 분포를 보면, 10인 초과 30인 이하의 업체가 71개(37.8%)로 가장 많고, 종사자수가 5인 초과 10인 이하인 업체가 36개(19.1%) 포함되어 있으며, 30인 초과 50인 이하 업체와 50인 초과 100인 이하 업체가 각각 26개(13.8%), 5인 이하

업체가 24개(12.8%), 그리고 100인 이상 업체가 5개(2.7%) 포함되어 있다.

<표 4-13> 종사자 기준 기업규모

(단위 : 개소, %)

구분	5인 이하	5인 초과 10인 이하	10인 초과 30인 이하	30인 초과 50인 이하	50인 초과 100인 이하	100인 이상
사업체수	24	36	71	26	26	5
비율	12.8	19.1	37.8	13.8	13.8	2.7

도내로 이전하기 이전의 소재지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에서 117개(62.2%), 서울시에 23개(12.2%), 인천시에서 18개(9.6%), 대전시에서 15개(8.0%) 경남과 충북에서 각각 4개(2.1%), 부산시와 대구시에서 각각 2개(1.1%), 그리고 울산시와 경북, 전남에서 각각 1개(0.5%)가 도내로 이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4> 도내로 이전하기 이전의 소재지별 분포

(단위 : 개소, %)

지역	사업체수	비율	지역	사업체수	비율
서울	23	12.2	강원	0	0.0
부산	2	1.1	충북	4	2.1
대구	2	1.1	전북	0	0.0
인천	18	9.6	전남	1	0.5
대전	15	8.0	경북	1	0.5
울산	1	0.5	경남	4	2.1
경기	117	62.2	합계	188	100.0

도내 입지별 분포를 보면, 천안시에 가장 많은 47개 업체(25.0%)가 입주했으며 당진 군에 38개(20.2%), 아산시에 35개(18.6%), 공주시, 보령시, 그리고 논산시에 각각 11개(5.9%) 등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5> 도내로 이전 후의 소재지별 분포

(단위 : 개소, %)

지역	사업체수	비율
천안시	47	25.00
공주시	11	5.85
보령시	11	5.85
아산시	35	18.62
서산시	7	3.72
논산시	11	5.85
계룡시	2	1.06

지역	사업체수	비율
금산군	9	4.79
부여군	1	0.53
청양군	4	2.13
홍성군	4	2.13
예산군	8	4.26
당진군	38	20.21
합계	188	100.00

<표 4-16> 이전기업의 설립연도에 따른 분포

(단위 : 개소, %)

설립연도	사업체수	비율
1953	1	0.53
1967	1	0.53
1968	2	1.06
1976	1	0.53
1978	1	0.53
1979	2	1.06
1980	3	1.60
1981	1	0.53
1984	3	1.60
1985	2	1.06
1986	3	1.60
1987	2	1.06
1988	2	1.06
1989	5	2.66
1990	4	2.13
1991	1	0.53
1992	4	2.13
1993	4	2.13

설립연도	사업체수	비율
1994	6	3.19
1995	5	2.66
1996	5	2.66
1997	10	5.32
1998	9	4.79
1999	9	4.79
2000	20	10.64
2001	12	6.38
2002	8	4.26
2003	6	3.19
2004	17	9.04
2005	11	5.85
2006	10	5.32
2007	11	5.85
2008	6	3.19
2009	1	0.53
합계	188	100.00

이전기업의 설립연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 2000년대 중반에 설립된 업체들의 빈도가 가장 높고, 가장 오래된 업체는 1953년에 설립되었으며, 가장 신생의 업체는 2009년에 설립되었다.

<표 4-17> 이전기업의 이전연도에 따른 분포

(단위 : 개소, %)

이주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체수	12	19	32	71	51	3
비율	6.3	10.1	17.0	37.8	27.1	1.6

이전연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 71개 업체가 2008년에 도내로 이전하였고, 2009년에 이전한 업체의 수는 51개, 2007년에 이전한 업체의 수는 32개, 2006년에 이전한 업체의 수는 19개 등으로 나타난다.

<표 4-18> 이전기업의 이전사유에 따른 분포

(단위 : 개소, %)

구분	생산비 절감	물류비 절감	지원금 혜택	부지가격 저렴	연고지	부지소유
사업체수	175	5	3	3	1	1
비율	93.09	2.66	1.6	1.6	0.53	0.53

이전기업들은 이전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이전사유라고 답했으며, 지원금 혜택은 중요한 이전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2)</sup>

22) 하지만, 설문조사에 포함된 188개 이전기업의 상당수가 이전보조금을 받지 않은 업체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이전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으로써 이전보조금 혜택이 주요한 이전사유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2) 이전보조금을 통한 유치기업

### (1) 설문조사의 개요

충남 도청으로부터의 이전보조금을 받은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조사원이 해당 유치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기업 내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지 작성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내용은 다음의 12가지로 구분된다 : 1) 설립연도, 산업분류, 회사유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이전연도, 이전해 오기전 소재지, 이전유형, 이전사유를 포함하는 이전관련 사항, 3) 이전 전후 고용의 변화와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4) 이전 전후 생산액,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중간재 구매 비율,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중간재 공급 비율과 이러한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5) 수출실적, 6) 지방세 납부실적, 7) 기술개발 전문인력 현황, 8) 조세감면액 및 이전관련 보조금 수혜액, 9) 오·폐수 및 산업폐기물이 배출량/처리량, 10) 지역사회 대상 봉사활동 내용, 11) 충남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도, 12) 지역 내 정착관련 애로사항 등이다.

### (2) 표본의 분포

설문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도내 입지분포를 살펴보면, 천안시로 22개 업체(35.5%)가 이전하여 가장 많은 표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당진군(18개 업체), 보령시(7개 업체), 홍성군(4개 업체) 등의 순으로 많은 표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9> 유치기업의 도내 입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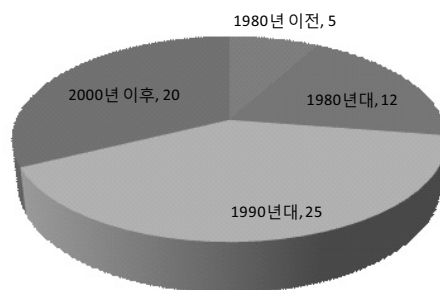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지역	사업체수	비율	지역	사업체수	비율
천안시	22	35.48	금산군	0	0.00
공주시	2	3.23	부여군	1	1.61
보령시	7	11.29	청양군	1	1.61
아산시	2	3.23	홍성군	4	6.45
서산시	3	4.84	예산군	2	3.23
논산시	0	0.00	당진군	18	29.03
계룡시	0	0.00	합계	62	100.00

반면, 이들 62개의 유치기업들 가운데 경기도에서 이전한 업체가 37개(59.7%), 인천 시에서 이전한 업체가 19개(30.6%),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전한 업체가 6개(9.7%)로 모두 수도권으로부터 도내로 유치된 기업들임을 볼 수 있다.

설립연도를 1980년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 이후로 구분하면, 62개 유치기업 가운데 25개 업체(40.3%)가 1990년대 설립되었으며 20개 업체(32.3%)가 2000년 이후에 설립되어 업력이 20년 이하인 업체의 비중이 72.6%에 달함을 볼 수 있다.

<그림 4-2> 충남 유치기업의 설립연대별 분포



계열사 여부 등에 따라 유치기업을 구분하면, 62개 업체 가운데 93.6%에 달하는 58개 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체이고 3개 업체는 국내 기업의 계열사이며 나머지 1개 업체

는 외국 기업의 계열사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전시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하는 경우는 31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공장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치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은 57개 업체(91.9%)를 포함하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 1개 업체, 건설업이 3개 업체,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이 1개의 업체를 포함한다. 중분류 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가장 많은 13개 업체를 포함하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각각 7개의 업체를 포함한다.

<표 4-20> 산업중분류 기준 유치기업의 분포

(단위 : 개소, %)

산업분류	사업체수	비율	산업분류	사업체수	비율
식료품 제조업	2	3.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	9.6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1.6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4.8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	1.61	전자장비 제조업	6	9.6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1.6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11.2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	4.8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20.9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1.6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	1.61
1차 금속 제조업	6	9.68	전문직별 공사업	3	4.8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11.29	도매 및 상품중개업	1	1.61
			합계	62	100

유치기업의 유형을 기술이나 경영에 관한 지정여부(중복지정 가능)에 따라 구분하

면,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이 23개(37.1%), 벤처기업이 20개(32.3%), 그리고 경영혁신형 기업이 9개(1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1> 유치기업의 지정여부(중복지정 가능)

(단위 : 개소, %)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23	37.1	20	32.3	9	14.5

유치기업의 이전사유별 분포를 보면, 1순위로 20개 업체가 충남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임대료), 18개 업체가 도내의 저렴한 원자재 및 중간재, 11개 업체가 협력업체(거래업체)와의 인접성을 꼽았다. 2순위로는 20개 업체가 역시 낮은 지가(임대료)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11개 업체가 충남으로부터의 이전보조금을 지적했으며 이는 3순위에서 가장 많은 업체들이 이전사유로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충남의 낮은 지가(임대료)와 더불어 이전보조금이 기업의 이전결정에 영향이 있음을 함축한다.

<표 4-22> 유치기업의 이전사유

(단위 : 개소,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낮은 지가(임대료)	20	32.3	20	32.3	10	16.1
저렴한 원자재 및 중간재	18	29.0	7	11.3	0	0.0
저렴한 인건비	3	4.8	9	14.5	17	27.4
풍부한 생산 인력	0	0.0	3	4.8	2	3.2
충남으로부터의 이전보조금	3	4.8	11	17.7	19	30.7
물류비 절감	5	8.1	7	11.3	9	14.5
협력업체(거래업체)와의 인접성	11	17.7	4	6.5	5	8.1
대규모 부지	1	1.6	0	0.0	0	0.0
기타	1	1.6	1	1.6	0	0.0

### 3) 이전기업 사례

비록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경우는 아니지만, 대기업의 도내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아산시와 천안시에 각각 위치한 대기업의 아산공장과 천안공장의 고용, 지방세 납부,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 혹은 중간재 구매실적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대기업의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한다.

## 제 3 절 분석결과

### 1. 고용창출

#### 1)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 (1) 전체

도내에 지속적으로 입지해 있는 기존 기업과 이전기업 간의 이전 전후 고용변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도내로의 이전 전후 (2006년과 2009년) 고용변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별 모든 고용을 포함하는 전체 고용의 변화와 상용직 종사자의 고용변화를 기존 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해 비교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이전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정(+)의 계수를 가져 기존 기업의 고용에 비해 이전기업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sup>23)</sup>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존 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기존 기업의 두 시점 간 고용변화 대비 이전기업의 상대적 고용변화는 앞에서 제시된 이중격차모형을 통해 분석될 수 있으나, 기존 기업의 수가 워낙 많아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격차모형 대신에 개별 사업체의 두 시점 간 고용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개별 사업체의 특성과 함께 이전기업에 대한 더미변수만을 포함하는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

$$dE_j = \beta_0 + \beta_1 Move_j + Char_j \zeta + v_j$$

여기서, 종속변수인  $dE_j$ 는 개별 사업체  $j$ 의 두 시점 간 고용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경우 이전기업의 상대적 고용변화를 나타내는  $\beta_1$ 는 이중격차모형에서의  $\beta_3$ 와 동일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분석에 포함된 관측수의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다.

---

23) 개인 사업체인 경우 단독 사업체이거나 대표자가 남성일 가능성이 커, 조직형태에 대한 더미변수는 회귀식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체의 특성에 따른 고용변화를 보면, 초기 고용-즉, 2006년의 고용과 고용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단독 사업체보다는 본사나 공장, 혹은 회사법인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자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고용을 더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며, 제조업이 여타의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을 보다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3>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 고용			상용직		
	(1)	(2)	(3)	(4)	(5)	(6)
상수항	0.1000 (1.62)	3.8387 <sup>+</sup> (1.79)	3.6666 <sup>+</sup> (1.80)	0.0548 (0.93)	3.7041 <sup>+</sup> (1.97)	3.5348* (2.00)
이전기업	1.1795 (0.75)	1.6802 (1.30)	1.2004 (0.94)	1.2332 (0.96)	1.7646 <sup>+</sup> (1.79)	1.2958 (1.34)
초기 고용		-0.0857 (1.11)	-0.0861 (1.12)		-0.0897 (1.13)	-0.0902 (1.13)
단독 사업체		-3.6845 <sup>+</sup> (1.85)	-3.5660 <sup>+</sup> (1.87)		-3.6973* (2.01)	-3.5812* (2.04)
남성 CEO		0.3839 <sup>+</sup> (1.83)	0.3093 <sup>+</sup> (1.82)		0.3308 (1.58)	0.2579 (1.54)
제조업			1.0921 <sup>+</sup> (1.78)			1.0675 <sup>+</sup> (1.73)
Adj. R2	0.0000	0.0690	0.0694	0.0000	0.0834	0.0838

주 : 괄호 안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절대치)으로, 이는 시군구-대분류 산업수준에서 이분산과 계열상관을 고려한 Huber-White의 robust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분석에 포함된 사업체의 수는 2006년과 2009년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88,785개의 기존 기업과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한 236개의 이전기업을 포함하고 있음.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함

이러한 분석에 포함된 전체 표본을 초기 고용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 분석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먼저, 초기 고용이 5인 이하

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계수값 또한 3.5 이상으로 기존 기업에 비해 3명 이상의 고용을 추가적으로 창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4> 초기 고용이 5인 이하인 표본을 대상으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 고용			상용직		
	(1)	(2)	(3)	(4)	(5)	(6)
상수항	0.1083** (6.51)	1.8585** (10.02)	1.8611** (10.04)	0.0317** (2.72)	1.4833** (10.04)	1.4827** (10.04)
이전기업	3.8519** (2.76)	3.8562** (2.76)	3.8247** (2.77)	3.5524** (2.64)	3.6149** (2.67)	3.5976** (2.67)
초기 고용		-0.1653** (7.33)	-0.1667** (7.45)		-0.1800** (6.72)	-0.1800** (6.72)
단독 사업체		-1.5505** (8.57)	-1.5559** (8.61)		-1.4569** (9.92)	-1.4590** (9.95)
남성 CEO		0.1399** (7.96)	0.1341** (7.68)		0.1145** (7.83)	0.1113** (7.79)
제조업			0.1144+ (1.95)			0.0612 (1.51)
Adj. R <sup>2</sup>	0.0045	0.0206	0.0208	0.0070	0.0296	0.0297

주 : 괄호 안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절대치)으로, 이는 시군구-대분류 산업수준에서 이분산과 계열상관을 고려한 Huber-White의 robust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분석에 포함된 사업체의 수는 2006년과 2009년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76,838개의 기존 기업과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한 101개의 이전기업을 포함하고 있음.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함

초기 고용이 6인 이상 50인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종사자수가 5인 이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큼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이전기업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값이 2 이상의 수치를 가져 이전기업의 추가적인 고용이 기존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2명 이상

크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의 고용을 나타내는 변수인 초기 고용은 전체 고용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아주 낮아지지만, 상용직 종사자수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성을 지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일 수록 고용창출효과가 작음을 의미한다.

<표 4-25> 초기 고용이 6인 이상 50인 이하인 표본을 대상으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 고용			상용직		
	(1)	(2)	(3)	(4)	(5)	(6)
상수항	0.2799 (1.43)	1.7941** (2.68)	1.6826* (2.53)	0.0758 (0.53)	1.8763** (4.20)	1.7602** (4.17)
이전기업	3.5335* (2.41)	3.4321* (2.39)	2.6198* (1.84)	2.8479** (2.83)	2.9297** (3.01)	2.1591* (2.34)
초기 고용		-0.0167 (0.80)	-0.0273 (1.32)		-0.0546** (3.60)	-0.0686** (4.86)
단독 사업체		-2.3300** (4.15)	-2.3672** (4.21)		-2.0448** (4.71)	-2.0840** (4.79)
남성 CEO		0.6849+ (1.82)	0.5466 (1.50)		0.5336** (2.73)	0.4259* (2.26)
제조업			1.7741** (5.10)			1.7275** (6.30)
Adj. R2	0.0008	0.0067	0.0100	0.0009	0.0110	0.0169

주 : 괄호 안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절대치)으로, 이는 시군구-대분류 산업수준에서 이분산과 계열상관을 고려한 Huber-White의 robust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분석에 포함된 사업체의 수는 2006년과 2009년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10,776개의 기존 기업과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한 118개의 이전기업을 포함하고 있음.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함

## (2) 시군구-중분류 산업-초기 고용을 기준으로 매칭

개별 사업체의 고용변화는 국가전체적인 경기변동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위치한 지역과 이 기업이 속한 산업 특유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더불어, 개별 사업

체의 초기 고용규모에 따라 고용변화가 상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산업 고유의 요인에 의한 고용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88,785개의 기존 기업들 가운데 236개의 이전기업과 동일한 지역-산업(중분류)에 속하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236개의 개별 사업체와 초기 고용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존 기업만을 대상으로 이중격차모형을 추정한다.

이전기업의 상대적 고용창출효과는 이전기업에 대한 더미변수와 2009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간 교차항인 이전기업\*2009의 계수값은 분석의 대상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존 기업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앞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표본을 초기 고용이 5인 이하인 사업체로 한정하면 앞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전기업이 기존 기업에 비해 고용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고용이 6인 이상 50인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 한정하여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더불어 앞에서 보고된 분석의 결과가 지역이나 산업 고유의 경기변동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표 4-26> 시군구-중분류 산업-초기 고용에서 이전기업과 가장 유사한 기존 기업만을 대조군으로 포함하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 고용			상용직		
	전체	5인 이하	6-50인	전체	5인 이하	6-50인
상수항	16.3650** (3.76)	2.6388** (7.10)	17.9513** (6.36)	15.1289** (3.50)	2.3081** (8.07)	13.9123** (5.89)
이전기업	7.4669** (4.63)	0.0422 (0.25)	2.2831** (2.96)	6.7284** (4.47)	0.3291+ (1.93)	1.9142* (2.63)
2009	0.3491** (3.12)	0.2752** (3.73)	1.0948 (1.52)	0.1326 (1.51)	0.0614+ (1.86)	0.8578 (1.38)
이전기업 * 2009	0.9305 (0.58)	3.6852* (2.51)	2.7187+ (1.69)	1.1555 (0.88)	3.5228* (2.48)	2.0660+ (1.83)
단독 사업체	-14.9307** (3.35)	-0.8963** (2.64)	-8.3347** (4.51)	-15.2633** (3.45)	-2.1065** (7.91)	-7.9765** (4.47)
남성 CEO	0.4809* (2.32)	0.2710** (3.72)	-0.9049 (0.45)	0.4856* (2.47)	0.2560** (3.55)	0.8234 (0.59)
제조업	11.0945** (5.78)	1.3262** (2.87)	5.8066** (3.30)	11.3045** (6.01)	1.3629** (3.10)	6.5790** (4.28)
Adj. R <sup>2</sup>	0.2023	0.0890	0.1129	0.2102	0.1157	0.1541
N(이전/기존)	236/3,099	101/2,852	118/232	236/3,099	101/2,852	118/232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절대치)으로, 이는 시군구-대분류 산업수준에서 이분산과 계열상관을 고려한 Huber-White의 robust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함

### (3) 개별 사업체의 특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일대일(one-to-one)로 매칭

비록 지역과 산업, 그리고 초기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전기업과 분석에 포함되는 기존 기업이 유사하도록 매칭을 시키고 회귀분석에 사업체 유형, 대표자 성별, 제조업 여부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개별 사업체의 특성들을 통제하지만, 여전히 대조군(기존 기업)에 속하는 사업체의 수가 너무 많아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과대하게 추정

될 수 있다. 더불어, 두 집단 간에 종속변수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상이하고 이러한 상이한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두 집단 가운데 한 집단에만 편중되어 분포하는 경우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추정상의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sup>24)</sup>

이를 위해, 236개의 개별 이전기업에 대해 2009년에 동일한 지역(시군구)-산업(중분류)에 속하고 2006년에 가장 유사한 고용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세세분류에 의한 산업, 조직형태, 사업체 유형, 대표자 성별 등에서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1개의 기존 기업을 추출하여 개별 이전기업과 일대일로 매칭 되는 표본을 구성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과 산업, 그리고 개별 사업체의 특성들을 기준으로 이전기업과 기존 기업을 매칭 하는 경우 일대일로 매칭 되지 않고 하나의 이전기업에 대해 다수의 기존 기업이 매칭 되는 경우가 많아 매칭된 다수의 기존 기업 가운데 임의적으로 하나의 기업만을 선정하여 일대일로 매칭을 시킨 후에 분석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

24)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패널자료임을 고려할 때, 개별 사업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분석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전기업의 상대적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하는 변수가 이전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체를 나타내는 변수와 이전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간 완전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여 이전기업의 상대적 고용창출효과를 확인할(identify) 수가 없다.

<표 4-27> 이전기업과 동일한 시군구-중분류 산업에 속하며 세세분류에 의한 산업, 조직유형, 사업체형태, 대표자의 성별에서 유사성이 가장 큰 기존 기업 가운데 초기 고용의 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존 기업과 이전기업 간 고용의 변화에 대한 초기 고용의 규모별 분석결과

표본	구분	이전여부	고용변화(명)	t-값
전체 (N = 466)	전체 고용	이전기업 기존 기업	1.06 1.14	-0.05
	상용직	이전기업 기존 기업	0.96 0.76	0.14
5인 이하 (N = 202)	전체 고용	이전기업 기존 기업	3.96 0.42	2.43*
	상용직	이전기업 기존 기업	3.58 0.37	2.21*
6-50인 (N = 232)	전체 고용	이전기업 기존 기업	3.68 1.59	1.04
	상용직	이전기업 기존 기업	2.75 0.93	1.28
51인 이상 (N = 32)	전체 고용	이전기업 기존 기업	-36.31 2.43	-2.63*
	상용직	이전기업 기존 기업	-28.50 2.06	-2.32*

주 : t-값은 이전기업의 고용변화와 기존 기업의 고용변화가 동일함을 귀무가설로 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 사자를 포함하며, 기존 기업은 2006년과 2009년 모두 총남에 입지해 있는 기업을 지칭함

이전기업과 기존 기업 간 이러한 일대일 매칭과정을 거친 표본에 대해 두 시점(2006년과 2009년) 간 고용변화의 집단 간 차이의 유무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sup>25)</sup> 233개의 이전기업과 이에 대해 일대일로 매칭 되는 233개의 기존 기업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두 집단 모두 2009년의 고용이 2006년의 고용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기

25) 236개의 이전기업 가운데 일대일로 매칭 되는 기존 기업이 부재한 경우가 3개 기업에서 발생했으며, 따라서 이 3개의 이전기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존 기업의 고용증가가 평균적으로 오히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sup>26)</sup> 반면 상용직 종사자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전기업의 고용증가가 기존 기업의 고용증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본을 초기 고용이 5인 이하인 사업체로 한정하여 분석하는 경우 전체 고용과 상용직 종사자수 모두에서 이전기업의 고용증가가 기존 기업의 고용증가에 비해 약 3.2~3.5명 가량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볼 수 있다.

분석을 초기 고용이 6인 이상 50인 이하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전기업이 기존 기업에 비해 보다 큰 고용증가를 경험하였지만 증가의 정도가 초기에 5인 이하의 고용을 가지고 있던 사업체 보다 약할 뿐만 아니라 이전기업과 기존 기업 간 고용증가의 차이가 10%의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비록 표본수는 작지만, 초기 고용이 5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기존 기업의 고용이 증가한 반면 이전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집단 간 고용변화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

지역-산업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전기업과 기존 기업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한 고용변화의 결과는 회귀분석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여,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크게 발생함을 볼 수 있다.

## 2) 이전기업과 유치기업

### (1) 이전에 따른 고용의 변화

이전 전후 고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132개 이전기업들 가운데 47.7%에 해당하는 63개 기업은 이전을 전후로 고용을 증가시킨 반면, 14.4%에 해당하는 19개 기업은 이전 후에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26)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아 두 집단 간 고용변화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표 4-28>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고용의 변화

(단위 : 개소, 명)

이전 전후 고용 변화	업체수	평균 고용		
		이전 전(A)	이전 후(B)	증감
증가	63	35.1	44.7	9.6
불변	50	15.7	15.7	0.0
감소	19	28.2	21.9	-6.3

고용이 증가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이전 전후 고용이 대략 10명 증가하였고, 고용이 감소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여섯 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전체 132개 기업들의 이전 전후 고용은 평균적으로 네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sup>27)</sup>

<표 4-29> 유치기업의 이전에 따른 고용의 변화

(단위 : 개소, 명)

이전 전후 고용 변화		업체수	평균 고용		
			이전 전(A)	이전 후(B)	증감
전체 고용	증가	51	123.2	144.6	21.4
	감소	4	309.0	178.8	-130.2
상용직	증가	49	118.4	138.7	20.3
	감소	4	274.0	157.5	-116.5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충남도청으로부터 이전보조금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62개 유치기업들 가운데 충남으로의 이전을 전후로 전체 고용-상용직 고용과 비상용직 고용의 합-이 증가한 업체의 수는 51개이며, 이들의 평균 고용은 이전 전의 123.2명에서 이전 후의 144.6명으로 21.4명만큼 증가하였다. 반면, 이전을 전후로 고용이 감소한 업체의 수는 4개이고 이들의 평균 고용은 309.0명에서 178.8명으로

27) 평균 고용의 증가가 영(0)이라는 귀무가설은 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130.2명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용의 변화를 상용직 고용만을 가지고 분석하면, 이전 전후 고용이 증가한 업체는 49개로 이들의 고용은 평균적으로 20.3명만큼 증가하였다. 고용이 감소한 업체는 4개 이들의 고용은 평균적으로 116.5명만큼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sup>28)</sup>

유치기업의 이전에 따른 고용변화는 전체 고용과 상용직 고용 모두에 있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폭은 10%의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영(0)과 다르지 않아 유치기업의 이전 후 고용이 이전 전의 고용에 비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 유치기업의 이전하기 전 고용규모에 의해 62개의 유치기업을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이들 집단 간 이전에 따른 고용변화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초기 고용이 60인 이하인 유치기업의 경우 전체 고용이 9.5명가량 증가하였고 상용직 고용은 8.9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 고용이 61인 이상 100인 이하인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에서는 전체 고용과 상용직 고용이 유사하게 대략 15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101인 이상의 초기 고용을 가지고 있던 유치기업은 이전에 따른 고용의 증가가 전체 고용과 상용직 고용에서 각각 2.4명과 1.2명으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가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0)과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는 표본에서 중간 규모의 초기 고용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28) 전체 고용을 기준으로 7개 업체의 고용이 불변이고, 상용직 고용을 기준으로 9개 업체의 고용이 불변이다.

<표 4-30> 이전하기 전 고용규모에 의해 구분된 유치기업 집단 간 이전에 따른 고용변화의 비교  
(단위 : 명)

표본	구분	이전 전후	고용	t-값
전체 (N = 62)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30.8 140.0	1.53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23.5 132.0	1.62
60인 이하 (N = 21)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42.6 52.1	4.29**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42.1 51.0	4.23**
61-100인 (N = 21)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85.9 101.4	4.76**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85.9 101.0	4.79**
101인 이상 (N = 20)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270.6 273.0	0.13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248.3 249.5	0.08

주 : t-값은 유치기업의 이전 후의 고용이 이전 전의 고용과 동일함을 귀무가설로 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한편, 이전 전후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유치기업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해당 산업의 경기불황(12개 업체), 채용시 지원자 부족(6개 업체), 높은 임금(5개 업체), 해당 기업 고유의 불황(4개 업체), 채용시 지원자의 숙련도 혹은 경험 부족(2개 업체) 등을 지적한다.

<표 4-31>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와 공장만 이전한 경우 간 유치기업 고용변화의 비교  
(단위 : 명)

표본	구분	이전 전후	고용	t-값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 (N = 31)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19.8 134.7	2.24*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11.7 123.9	1.84+
공장만 이전 (N = 31)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41.8 145.4	0.35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35.2 140.0	0.59

주 : t-값은 유치기업의 이전 후의 고용이 이전 전의 고용과 동일함을 귀무가설로 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고용측면에서의 분공장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유치기업을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와 공장만 이전한 경우로 구분하여 이전 전후 고용의 변화를 이 두 집단 간에 비교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 전체 고용은 이전 전의 119.8명에서 이전 후의 134.7명으로 평균적으로 14.9명만큼 증가하였으며 상용직 고용의 경우 111.7명에서 123.9명으로 12.2명만큼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폭은 각각 5%와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0)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공장만 이전한 경우 전체 고용은 이전 전의 141.8명에서 이전 후의 145.4명으로 3.6명만큼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지 못한다. 유사하게, 상용직 고용 역시 이전 전후 고용이 평균적으로 4.8명만큼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외지에 본사를 둔 분공장의 유치는 해당 분공장이 지역경제와 연계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에 제한적인 효과를 지님을 볼 수 있다.

<표 4-32>는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간 도내 이전 전후 고용변화에 대한 비교의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그리고 이중격차모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소자승법에서의 종속변수는 이전 전후의 고용변화-도내로 이전해 온 이후의 고용에서 도내로 이전해 오기 이전의 고용을 뺀 것-이고 고정효과모형과 이중격차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이전 전후의

고용에 해당한다.

통상최소자승법에서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 전후 고용변화는 이전기업의 고용변화에 비해 평균적으로 13명~17명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전보조금의 규모는 고용창출효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상최소자승법이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의 여러 특성들-도내로 이전해 오기 전의 고용, 이전해 온 지역과 연도, 제조업 여부, 본사를 제외한 공장만 이전해 온 경우(분공장, branch plant)을 통제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개별기업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한다. 하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더미변수가 모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추정이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전보조금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전보조금의 규모는 고용창출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변화를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간 그리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의 시점 간 변화-도내로의 이전 전후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격차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유치기업의 고용이 이전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83명만큼 컸으며 도내로의 이전 후에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모두 평균적으로 4명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유치기업의 고용증가는 이전기업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2> 이전기업과 유치기업 간 (상용직) 고용창출효과의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OLS			Fixed Effect		Difference-in-Differences		
	(1)	(2)	(3)			(1)	(2)	
유치기업	13.0833 (1.76) <sup>+</sup>	13.5044 (1.81) <sup>+</sup>	17.1445 (1.74) <sup>+</sup>	이전보조금	0.0017 (1.09)	유치기업	83.2565 (6.04) <sup>**</sup>	
이전보조금			-0.0026 (0.80)			이전보조금		0.0262 (2.70) <sup>**</sup>
						이전 후	3.6515 (0.55)	5.1187 (0.71)
이전 전 고용	0.0209 (0.25)	0.0212 (0.26)	0.0271 (0.34)			이전 후*유치기업	4.8646 (0.21)	
천안·아산·당진	-0.1065 (0.04)	0.1896 (0.08)	0.2744 (0.11)			이전 후*이전보조금		0.0002 (0.01)
분공장		-4.1199 (1.01)	-4.4944 (1.04)			분공장	-0.3091 (0.03)	4.5438 (0.48)
제조업	-3.6594 (0.77)	-3.9316 (0.84)	-5.0714 (1.03)			제조업	31.3587 (3.77) <sup>**</sup>	37.9740 (2.92) <sup>**</sup>
2005년	-9.6817 (2.10) <sup>+</sup>	-9.6547 (2.11) <sup>+</sup>	-8.7136 (1.93) <sup>+</sup>			2005년	8.2677 (0.46)	29.8867 (1.65) <sup>+</sup>
2006년	-4.4618 (0.42)	-4.2561 (0.39)	-4.6471 (0.43)			2006년	21.0032 (1.19)	45.2696 (2.46) <sup>+</sup>
2008년	3.6050 (1.22)	3.7426 (1.21)	4.3611 (1.31)			2008년	13.4681 (1.74) <sup>+</sup>	-1.6985 (0.18)
2009년	0.6415 (0.25)	0.4995 (0.19)	1.4015 (0.52)			2009년	0.0117 (0.00)	-12.6682 (1.58)
2010년	-17.8722 (1.17)	-17.2511 (1.14)	-18.7567 (1.26)			2010년	57.0456 (1.25)	100.6730 (2.39) <sup>+</sup>
2011년	-36.1967 (1.56)	-37.0565 (1.59)	-37.1463 (1.63)			2011년	40.4430 (0.81)	70.0891 (1.75) <sup>+</sup>
상수항	4.8694 (0.90)	6.6936 (1.17)	7.1331 (1.21)	상수항	59.8862 (59.00) <sup>**</sup>	상수항	-9.6767 (0.89)	-0.2722 (0.02)
				고정효과 개별 기업	194			
Adj. R <sup>2</sup>	0.0284	0.0295	0.0325	R <sup>2</sup>	within between overall	0.0061 0.1433 0.0696	Adj. R <sup>2</sup>	0.2387 0.2279
관측수		194		관측수		388	관측수	388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robust t-값;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 (2) 이전에 따른 연차별 평균 신규고용의 변화

이전 후 첫 해에는 신규고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며, 4년차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년차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첫 해에 신규고용이 가장 큰 이유는 충남으로의 이전이 기존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종사자 가운데 일부는 이전기업을 따라 충남으로 이주하기 보다는 기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

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전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사자를 대체할 인력을 이전해 오는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존 종사자의 이직에 따른 신규고용은 이전 후 일정 기간 - 본 연구에서는 4년차- 까지 감소할 것이다.

<표 4-33> 이전 후 연차별 평균 신규고용

(단위 : 명)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상시직	4.22	2.81	2.57	1.88	3.00	3.82
비상시직	0.84	0.77	0.70	0.71	1.65	1.63
업체수	132	151	119	52	29	11

주 : 비상시직은 임시직 종사자, 일용직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함.

이전 후 5년차와 6년차에는 신규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이전기업이 이전 후에 새로운 지역에서의 정착 -이를 테면, 지역 내 기존 기업과의 연계나 지역경제 내 융합을 위해 시일이 요구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기여가능성 역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해석은 분석기간 동안 경기변동에 의한 연차별 신규고용의 전국적 수요와 공급에 큰 변화가 없음을 전제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규고용의 연차별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신규고용을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상시직 고용의 변화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경기변동에 의한 신규고용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고용의 변화를 통해 주로 이뤄짐을 가정한다.

### 3) 도내 입지 대기업 사례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전기업의 고용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고용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도외 지역의 사람이 고용된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출신지별 신규 채용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2,704명과 2,113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졌으며 2010

년에는 그 규모가 훨씬 증가하여 4,7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도내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각각 6.7%(171명, 2008년), 8.4%(177명, 2009년), 9.9%(466명, 2010년)로 나타나 도내 신규 채용의 규모뿐만 아니라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산업연관

### 1) 이전기업과 유치기업

#### (1) 이전 전후 연차별 평균 생산, 구매, 그리고 공급의 변화

통계청의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해 불변 가격으로 나타내어진 개별 기업의 연차별 생산액의 이전 전후 변화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도내로 이전 후에 48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액은 도내로 이전 후에 평균적으로 25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급액 역시 27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유치기업의 생산, 도내 업체로부터의 구매,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공급의 이전 전후 변화

62개의 유치기업 가운데 이전 전후 생산액,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중간재 구매 비중,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중간재 공급비중 모두에 대해 유의한 응답을 한 업체는 49개에 해당한다. 이러한 49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물가의 상승이 고려된 실질 생산은 도내로 이전해 오기전에 비해 이전해 온 후에 오히려 감소한 반면 도내 업체로부터의 구매비중이나 공급비중은 각각 5.2%p와 4.0%p만큼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sup>29)</sup>

---

29) 이전을 전후로 실질 생산의 감소는 이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거나 국가전체의 경기변동-즉, 불경기-에 기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4-34> 유치기업의 실질 생산액,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 구매비중,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나 중간재 공급비중의 이전 전후 변화

(단위 : 백만원, %)

표본	구분	이전 전후	생산액/비중	t-값
전체 (N = 49)	실질 생산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55,705 47,349	-0.73
	구매비중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9.3 24.5	5.96**
	공급비중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29.8 33.8	3.47**
25십억원 이하 (N = 24)	실질 생산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2,044 15,965	1.68
	구매비중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20.2 24.6	3.84**
	공급비중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30.0 32.5	3.14**
25십억원 초과 (N = 25)	실질 생산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97,621 77,478	-0.91
	구매비중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9.5 24.4	4.51**
	공급비중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29.6 35.0	2.57*

주 : t-값은 유치기업의 이전 후의 실질 생산액,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비중,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비중이 이전 전의 그것들과 동일함을 귀무가설로 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분석을 도내로 이전해 오기전의 명목 생산액 기준 25십억원 이하의 업체(24개)와 이를 초과하는 업체(25개)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생산규모가 작았던 업체들은 이전 전후 실질 생산액의 증가를 경험한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규모가 컸던 업체들은 실질 생산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에 구매비중이나 공급비중의 변화는 두 집단 모두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증가폭은 두 집단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을 전후로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기존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도내 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을 전후로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나 중간재 공급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도내 업체로부터의 수요의 부재와 도내 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 2) 도내 입지 대기업 사례

### (1)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중간재 구매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경우,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 구매실적이 상당히 커 산업연관에 의한 지역경제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구매실적을 보면, 2008년에 3.8조원, 2009년에 3.9조원, 그리고 2010년에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협력업체의 도내 창업 혹은 이전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이 도내에서 생산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1차 부품 공급업체의 도내 이전이 14건 발생하였으며, 이 역시 산업연관에 의한 지역경제 기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3. 조세의 감면, 이전보조금 수취, 그리고 지방세 납부

### 1) 유치기업

설문조사에 포함된 62개의 유치기업 가운데 지방세 감면을 받은 업체는 25개(40.3%)에 해당하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453백만원(62개 유치기업 전체적으로는 평균 183백만원)의 지방세(누적액)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이를 수취한 유치기업의 수가 38개(61.3%)에 해당하며, 이들이 받은 이전보조금(누적액)의 평균치는 2,227백만원(62개 유치기업 전체적으로는 평균 1,36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010년에 납부한 지방세액에 대해서는 62개 유치기업 가운데 59개 업체가 답을 했으며, 이들이 납부한 지방세액 평균치는 7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처럼 유치기업이 감면받은 지방세액과 이전보조금에 비해 이들이 납부한 지방세액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것처럼 보여 지방재정의 측면에서는 기업유치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지방세 감면액과 이전보조금이 누적액인 반면 지방세 납부액은 2010년 한 해에 한정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결론은 유치기업의 향후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2) 도내 입지 대기업 사례

유치기업의 지방세 납부를 통한 지역경제(지방재정)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지방세 납부실적을 보면, 충남에 연도별로 대략 10억원(2008년), 15억원(2009년), 13억원(2010년)을 납부했으며 아산시와 천안시에 대략 290억원(2008년), 223억원(2009년), 242억원(2010년)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남도 및 아산시와 천안시의 재정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5>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연도별 지방세 납부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충남도세	1,006	1,508	1,292
취득세	67	271	9
등록세	0	109	0
면허세	3	1	2
공동시설세	818	946	1,052
지방교육세	118	181	229
기타	0	0	0
아산/천안시세	29,036	22,338	24,284
주민세(소득세할)	6,171	5,028	7,317
주민세(법인세할)	17,157	11,356	9,665
재산세	589	803	1,147
자동차세	33	30	27
종합부동산세	6	6	12
도시계획세	1,257	1,519	1,738
종업원할사업소세	3,605	3,419	4,178
재산할 사업소세	217	177	198
기타(균등할 주민세)	1	1	1
사용료 및 준조세	5,860	8,380	10,030
전력기금	5,860	8,380	10,030

출처 : 해당 대기업 내부자료

## 4. 인구유입

기업의 유치는 도내로의 인구유입을 유발하여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한다.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공장의 임직원수를 출신지와 거주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적지가 도외인 15,100명 가운데 도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직원의 수는 12,100명으로 대략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유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sup>30)</sup>

<표 4-36>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출신지별 거주지별 임직원수

(단위 : 명)

구분		출신지		
		도내	도외	계
거주지	도내	1,300	12,100	13,400
	도외	200	3,000	3,200
	계	1,500	15,100	16,600

출처 : 해당 대기업 내부자료

주 : 출신지와 거주지는 각각 본적지와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2011년 4월 기준임

## 5. 집적의 경제

### 1) 전략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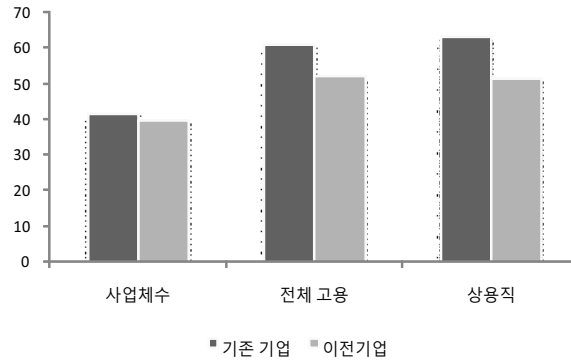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이전기업과 기존 기업 간 제조업 내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비중을 보면, 사업체수, 전체 고용, 상용직 종사자수 모두에서 이전기업의 비중이 기존 기업의 비중보다 낮아 이전기업이 도내 전략산업의 집적화 정도(비중)에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략산업과 연관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이전기업이 전략산업과 이에 대한 연관산업의 도내 집중도에 기여하는

30) 물론, 본적지가 도외 지역일지라도 대기업 아산/천안공장 설립이전에 도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의 실제 효과는 이보다 작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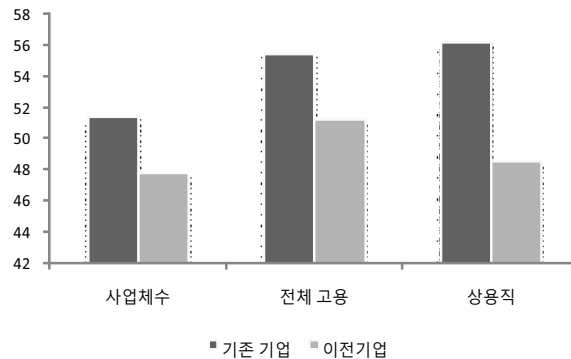
바가 적음을 의미한다.

<그림 4-3> 제조업 내에서 전략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그림 4-4> 제조업 내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연관 산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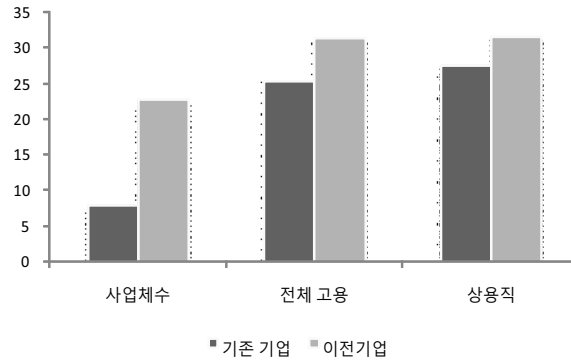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전략산업을 자동차·부품, 전자정보기기, 농축산바이오, 첨단문화로 구분하여, 개별 산업에 대해 이전기업과 기존 기업의 비중을 비교하면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이전기업의 비중이 기존 기업의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이의 연관산업에 대해서도 높게 나타나 이전기업이 도내 자동차·부품산업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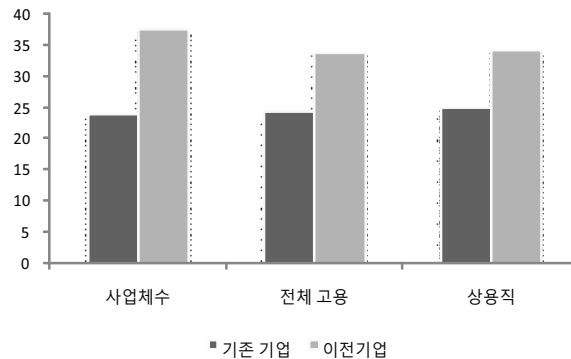
해서는 집적의 정도를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5> 제조업 내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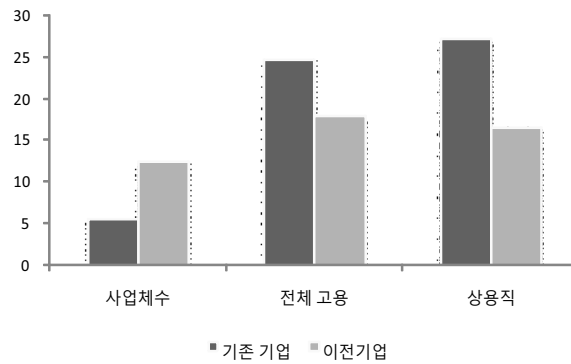
<그림 4-6> 제조업 내에서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연관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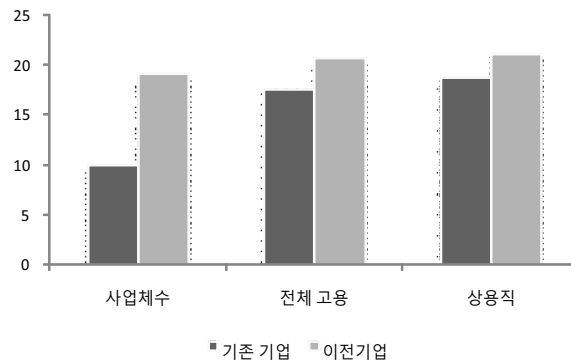
전자정보기기산업을 보면,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이전기업의 비중이 기존 기업의 비중을 초과하며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도내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집적도를 증가시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이와 연관된 산업에 대해서는 이전기업의 비중이 기존 기업의 비중보다 높아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연관산업에 대해서는 도내 집적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7> 제조업 내에서 전자정보기기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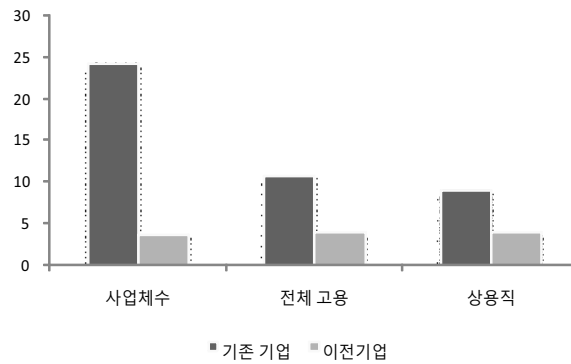
<그림 4-8> 제조업 내에서 전자정보기기산업에 대한 연관 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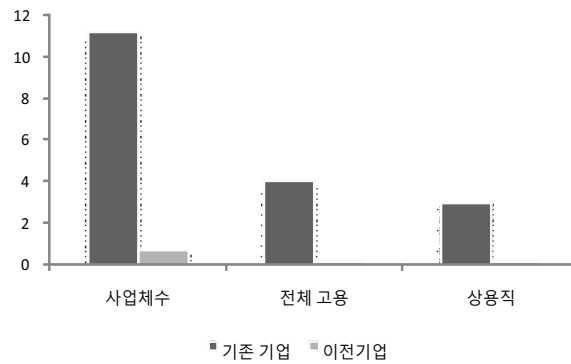
농축산바이오와 첨단문화의 경우, 해당 산업과 이의 연관산업 모두에서 이전기업의 비중이 기존 기업의 비중보다 현저히 낮아 집적도를 증가시키지 못함으로써 집적의 경제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4-9> 제조업 내에서 농축산바이오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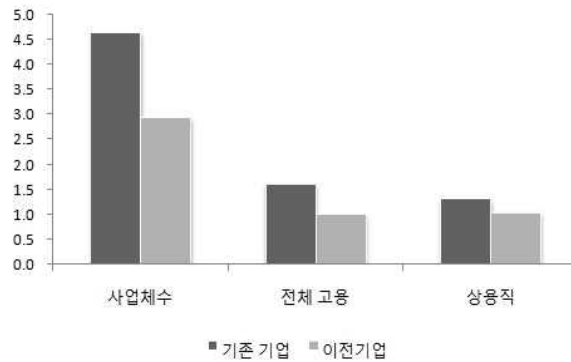
<그림 4-10> 제조업 내에서 농축산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관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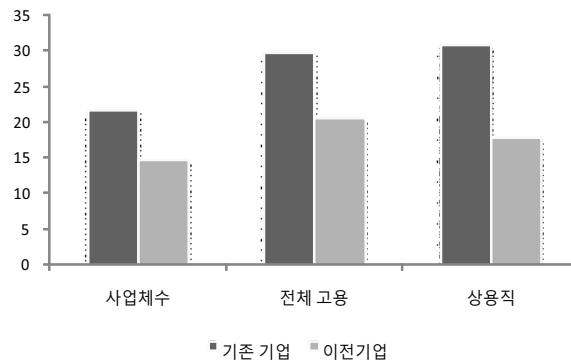


<그림 4-11> 제조업 내에서 첨단문화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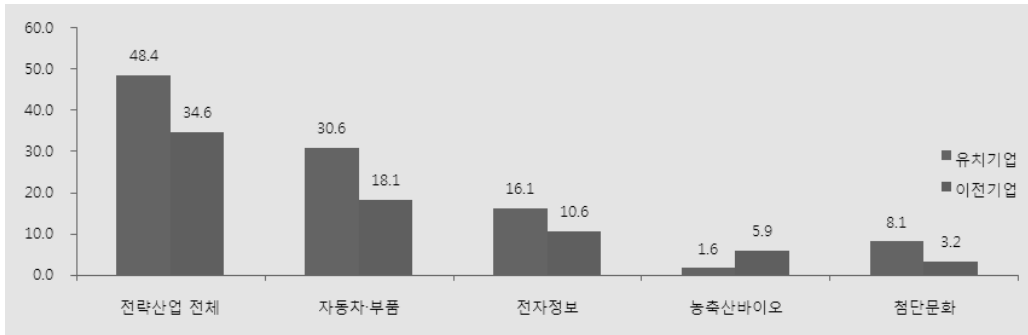
<그림 4-12> 제조업 내에서 첨단문화산업에 대한 연관 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 2009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가운데 충남의 전략산업-자동차·부품, 전자정보, 농축산바이오, 그리고 첨단문화-에 해당하는 업체수의 비중을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간 비교하면, 유치기업의 경우 48.8%가 전략산업에 해당하여 이전기업의 34.6%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그리고 첨단문화에서 유치기업의 비중이 이전기업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며, 단지 농축산바이오에서만 이전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추가적인 이전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31)</sup>

<그림 4-13>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가운데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수 비중(%)의 차이



충남의 투입산출(IO)구조에 기초하여 전후방 연관성이 가장 큰 5개의 산업(KSIC)에 확인한 후에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의 해당여부를 분석한 결과 62개의 유치기업 가운데 어느 업체도 전후방 연관성이 큰 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수 기준으로 2.7%, 종사자수 기준으로 3.3%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이나 고용측면에서 유치기업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볼 수 있다.

## 2) 수출업체의 집적

### (1) 이전기업 혹은 유치기업의 수출현황

도청의 유치기업 목록에 나타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시장에 자사 제품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의 수는 92개의 설문 대상 기업들 가운데 29개 기업에 해당한다. 수출업체가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는 도내의 비수출기업에게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전파되어 도내 기업들의 수출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수출의 경험여부를 기준으로 표본을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집단 간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규모의 상대적 비교의 결과,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일수록 규모가

31) 개별 전략산업 간에 일부 산업코드(KSIC)는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 전략산업의 비중이 전체 전략산업의 비중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sup>32)</sup> 만일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자사의 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업유치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에 중점을 둘 경우 이를 통한 도내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2개 유치기업 가운데 2010년 기준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40개(64.5%)로 이들의 2010년 수출실적은 평균적으로 \$16,992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62개 유치기업 전체의 평균 수출실적은 \$10,963천로 나타난다.

## 6.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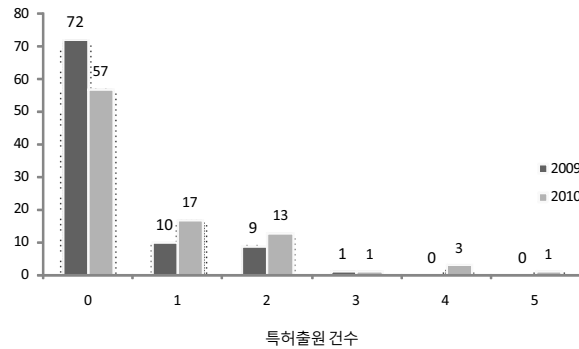
### 1) 이전기업

도청의 유치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92개의 기업들 가운데 36개(39.1%)의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43개(4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기업의 특허출원 실적을 보면, 2009년이나 2010년에 특허출원 실적이 있는 기업의 수는 43개이며 이들 가운데 2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기업의 수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0개와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

32) 수출의 경험이 없는 63개 기업의 평균 고용은 19명인데 반해 수출의 경험이 있는 29개 기업의 평균 고용은 72명이며, 이 둘 간의 차이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14> 이전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별 분포(개소)



설문조사에 포함된 92개 기업을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보유여부, 연구개발 투자여부, 특허출원 실적여부에 따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고용을 기준으로 규모의 차이를 비교하면 연구개발활동을 하거나 특허출원 실적이 있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7> 이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특허출원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고용의 차이 (단위 : 명)

R&D/특허출원 실적	R&D 전문인력		R&D 투자		특허출원 실적	
	평균	t-값	평균	t-값	평균	t-값
있음	50.6	1.53 <sup>+</sup>	48.3	1.51 <sup>+</sup>	49.9	1.71 <sup>*</sup>
없음	26.3		24.9		23.5	

주 : \*와 +는 R&D/특허출원 실적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용규모가 크다는 대체가설을 각각 5%와 10%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음을 나타냄

## 2) 유치기업

62개 유치기업 가운데 연구개발관련 전문 인력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50개 (80.6%)에 달하며, 이들의 인원수 평균은 7.4명으로 나타난다. 이들 50개 업체는 도내에서도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속한 평균 인원수는 7.0명으로 조사된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의 형태별 분포를 보면, 상시 기술개발 전담부서(31개 업체)가 가장 일반적이며, 그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27개), 임시 기술개발 전담(T/F)팀(21

개), 그리고 전담부서 없이 생산부서에서 수행(7개)의 형태로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표 4-38>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유치기업의 기술개발 전문인력(상시직 내부인력)의 수(평균)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독립연구소 포함)		상시 기술개발 전담부서		임시 기술개발 전담팀(T/F팀)		전담부서 없음 (생산부서에서 수행)		합계	
	업체수	인원수	업체수	인원수	업체수	인원수	업체수	인원수	업체수	인원수
도내 + 도외	27	5.4	31	3.7	21	4.2	7	2.7	50	7.4
도내	26	5.1	30	3.7	20	4.2	7	2.7	50	7.0

### 3) 도내 입지 대기업 사례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도내 중소기업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8건의 기술이전이 이뤄졌으며 금형기술 개발, 공정개선 지원, 공정불량 반감, SCM 최적화 등에 관한 도내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아산공장 내에는 2011년 4월 기준 총 1,351명의 전문인력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인근의 중소기업에게 비공식적 통로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의 파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짐작할 수 있다.

##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 유치기업

충남으로부터 이천보조금을 받고 도내로 이전한 유치기업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수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내용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혹은 불우 이웃 돕기, 장학금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다.

## 2) 도내 입지 대기업 사례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복지사업의 내용을 보면, 연간 지원액이 7.2억원(2008년), 8.4억원(2009년), 9.4억원(2010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비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은 장영실 영재교육원 지원, 사랑의 교복 전달, 내 고장 도서지원사업, LCD 장학금지원, LCD 독서 감상문 대회 등을 포함하는 교육/장학사업, 급식지원, 문화체험, 소아암 돕기 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나눔 가게 지원 등을 포함한다.

<표 4-39>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연도별 봉사활동 내용

구분	봉사팀	횟수	연인원(명)	총시간(시간)
2008	347	1,624	45,614	139,538
2009	288	919	16,866	50,168
2010	193	621	43,116	100,609

출처 : 해당 대기업 내부자료

주 :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해 하반기에 봉사활동이 중단되었으며, 2010년 조직변경으로 인해 봉사팀이 축소됨

## 3) 기업과 인근 주민 간 상생협력에 대한 의식

충남의 농공단지 내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에 대한 인근 주민인식조사 분석(김양중, 2011)에 의하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략 30%가 기업과 인근 주민 간에 우호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답하였으나 농림어업종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우호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0> 기업과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불편한 관계	보통	우호적 관계
공무원	8.89	59.44	31.67
농림어업종사자	14.63	61.79	23.58
사무종사자	6.67	61.67	31.67
기타	8.01	63.54	28.45

출처 : 김양중, 기업의 지역경제기여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분석 - 농공단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 2011

기업과 인근 주민 간 상생협력의 주체로서 사무종사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직종의 응답자들은 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사무종사자들은 거의 과반수가 지자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4-41> 상생협력의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주민	기타
공무원	5.00	27.22	56.67	10.56	0.56
농림어업종사자	9.76	26.83	46.34	17.07	0.00
사무종사자	11.67	50.83	27.92	7.92	1.67
기타	10.22	32.04	38.67	17.68	1.38

출처 : 김양중, 기업의 지역경제기여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분석 - 농공단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 2011

상생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가능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수도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4-42> 상생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공무원	6.67	21.11	72.22
농림어업종사자	13.82	42.28	43.90
사무종사자	11.67	46.25	42.08
기타	12.71	43.09	44.20

출처 : 김양중, 기업의 지역경제기여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분석 - 농공단지과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 2011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모든 직군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모든 직군에서 7%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3>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여부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공무원	3.89	20.00	76.11
농림어업종사자	6.50	32.52	60.98
사무종사자	4.58	33.75	61.67
기타	5.52	28.73	65.75

출처 : 김양중, 기업의 지역경제기여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분석 - 농공단지과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 2011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모든 직군에서 70%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모든 직군에서 5% 내외로 아주 낮게 나타난다.



<표 4-44>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지원여부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공무원	2.78	19.44	77.78
농림어업종사자	4.88	26.83	68.29
사무종사자	4.17	23.33	72.50
기타	6.35	25.14	68.51

출처 : 김양중, 기업의 지역경제기여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분석 - 농공단지과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 2011

기업과 인근 주민의 상생협력에 대한 설문 결과 종합하면, 기업과 인근 주민과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상생협력의 가능성이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주민이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 8. 부정적 효과

### 1)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의 기회비용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사례분석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해 충남도 및 해당 지자체(아산시/천안시)가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주를 이루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28억원의 지방세가 감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지자체장의 제한적인 가용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이 기업이 동기간에 충남도와 아산시/천안시에 납부한 지방세액 794억원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수치로서 지방세만을 고려할 경우 지역경제에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5>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연도별 조세감면과 보조금 수혜내역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국 세	세액공제	1,819	337	1,842
	계	1,819	337	1,842
지방세	취득세 감면	31	195	61
	등록세 감면	0	41	0
	계	31	236	61
합 계		1,850	573	1,903

출처 : 해당 대기업 내부자료

## 2) 환경오염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량을 기준으로 오수와 폐수의 발생량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용량보다 적으며,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도 9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환경오염의 부정적 영향이 적음을 볼 수 있다.

<표 4-46>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 아산/천안 사업장의 오수·폐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0년 기준)

구분	발생량	처리시설/재활용률
오 수	1,916천톤/년 (일평균 : 5천톤)	7천톤/일
폐 수	62,059천톤/년 (일평균 : 170천톤)	213천톤/일
폐기물	240천톤/년	97%

출처 : 해당 대기업 내부자료

주 : 폐기물은 폐액, 폐목재, 스티로폼, 비닐류 등을 포함

충청남도 도청의 이전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92개의 표본 기업들 가운데 76개(82.6%) 업체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용량 이하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치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62개 유치기업 가운데 6개 업체가 오수를 배출하지만 이들의 평균 처리 혹은 재활용률은 98.3%에 달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6개 업체 모두는 배출하는 폐수의 전량을 처리 혹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폐기물의 경우 37개

(59.7%) 업체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이들의 평균 처리 혹은 재활용률은 57.3%로 오·폐수에 대한 처리 혹은 재활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 제 5 장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 제 1 절 지역경제 기여도 증대

#### 1. 고용창출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충남으로 이전해 온 기업의 이전 전후 고용의 증가는 기존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업의 그것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전보조금을 받고 도내로 이전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이전해 오기전 종사자수가 100인 이하인 업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전후 고용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0)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적어도 단기에 있어 이전 후의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유치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한다.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이전 전후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사유 가운데 경기변동적 요인을 제외하고 지원자 부족, 지원자의 숙련도 혹은 경험 부족, 그리고 높은 임금을 지적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이나 전문기술인력의 공급을 위한 기업 맞춤형 산학연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공장 가설의 검증에 대한 결과는 기업의 유치가 공장뿐만 아니라 본사를 포함함으로써 유치된 기업의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창출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산업연계 강화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 이후에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 혹은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증가는 유치기업의 초기 생산액 규모에 상

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치기업과 기존 도내 업체와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와 공급을 통한 연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도내 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유치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개별 시군의 산업집적과 집적된 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을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기업유치정책을 펴으로써 기업유치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 선별적 기업유치

충남의 기업유치 정책 가운데 하나는 도의 전략산업이나 핵심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우선 유치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충남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과 관련하여 이와 연관된 기업의 유치에 중점을 두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도내 개별 시군의 기업경영관련 기반시설의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유치대상 기업과 입지대상 지역 간의 적합도를 높임으로써 유치기업과 해당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 4. 이전보조금 지원정책의 개선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업유치정책 자체의 효과에 대한

---

33) 강병주(1999)는 지역경제 발전모형을 소수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안과 다수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으로 구분한다. 전자를 택하기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구 등 대규모 물동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산업지원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본이나 기술 및 정보획득, 시장의 판로개척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행해야 할 과제는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활동의 홍보 등 비교적 간단하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자본력 부족, 경영능력의 미숙, 정보 및 기술 습득기회의 제약, 제품판매 시장 개척의 부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게 된다.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발전모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기업체들에게 정부보조금 및 은행융자 등 자금을 알선하고, 회계, 법률 및 세금 등 정부기관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돕고, 특허 및 창업지원 등이 포함된다.

회의적 결과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최근에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들 가운데 이전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수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며, 이는 이전보조금의 지원이 없어도 외지기업의 도내로의 이전이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보조금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이전보조금 이외의 사항-이를 테면, 충남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임대료) 혹은 도내의 저렴한 원자재 및 중간재-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는 이전보조금 위주의 기업유치정책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유치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sup>34)</sup>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이전보조금을 수취하고도 부도 등의 이유로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이전보조금과 같은 재정인센티브 대신에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여 공장의 신증설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집적단지 내에서 건물, 통신, 전기, 수도, 임대료 등이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되어 기업의 운영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사회간접자본 인센티브의 강화가 필요하다(변용환 외, 2009).

---

34) 변용환 외(2009)는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입지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유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켜야 함을 전제로 유치자원 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기업입지를 환경적 기반과 정책적 기반으로 분류한다. 전자는 동종 내지는 관련 산업의 집적도, 다양한 혁신기관의 집적, 풍부한 판매시장, 노동시장, 산학연,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 혁신 분위기, 정보통신, 입지지역 이미지, 저렴한 지가 등 그 지역에 주어진 기업입지 환경 요인을 망라한다. 후자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말하며 주로 조세감면,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업입지 요인들을 가지고 중요도 - 만족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필요성을 가진 기업유치요인으로 연구 인프라, 경영지원, 인력수급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지역 간 차별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유치요인은 발전시킨 반면에 경영지원등의 소프트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둘째, 각 지역, 업종, 기업규모, 그리고 유치경로에 따라 요인별 개선필요강도가 상당 부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집단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각각의 집단특성에 적합하게 기업유치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보여준다. 셋째, 교통, 생활 인프라, 산업인프라, 인력수급은 개선필요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은 개선이 힘든 부분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기업군 위주로 유치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인력양성 및 조달, 경영지원 및 연구 인프라가 가장 만족도가 낮은 정책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 노력에 의해 가시적인 기간 내에 일정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요인에 기업유치자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섯째,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과 이전한 기업 사이에 정책 지원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실적주의적 정책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 대우는 시정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문 및 집단 전반에 걸쳐 부동산가격상승가능성이 가장 보편적으로 유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 조성 등 기업입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가격상승가능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는 이와 같은 기업입지 요인을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요소로 분석하였다.

## 5. 근로자 가족의 동반이주 촉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는 유치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동반가족에 의한 지역 내 소비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출신지 기준 외지인의 비율은 국가산단에서 18.0%, 일반산단에서 35.5%,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41.5%로 이들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도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 외지에서 이전해 온 유치기업의 경우 가족과의 비동거 근로자 비율이 보다 높아 지역 내 소비증가의 효과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치기업의 종사자가 가족을 동반하여 도내에 이주하여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6.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과 병행하여 기업유치정책 추진

설문조사에 참여한 62개 유치기업 가운데 단지 13개 업체만이 계획입지(산업단지) 내로 이전을 했을 뿐 나머지 유치기업들은 개별입지로 이전하여 충청남도의 계획입지 유도방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Thompson(2002)은 중국 내 홍콩 의류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지구 내에 입지한 업체(clustered FDI)와 그렇지 않은 업체(dispersed FDI)간 산업연계 및 기술이전 등 지역네트워크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재 지역별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술보유수준에는 차이가 없으나 산업집적지구 내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공급업체와 높은 연계를 관계를 유지하며 기술이전 효과가 높고, 산업집적지구 내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수평적 확산효과에 있어서도 직업이직 등을 통한 기술 확산이 활발하며, 지역 업체 간의 교류도 산업집적지구 내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28%)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16%)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을 보여준다. 결국, 기업유치정책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 7. 조세감면제도의 유연성 증대

조세감면혜택은 가장 일반적인 기업유치정책의 하나이지만, 이의 유연성 증대를 통해 기업유치의 효과를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조세감면기간동안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을 받기위해 조세면제기간을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세면제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미래에 이익발생 시점에서 상계시켜줄 수도 있고,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거나 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회계 원칙상의 예외를 두워 고정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또는 즉시 상각 등의 방법을 인정하면 유치기업이 자신의 편리에 맞춰 과세 이익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김승진, 1999).



## 제 2 절 유치기업의 토착화

### 1. 유치기업의 정책 수요

62개의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유치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으로 기반시설 확충, 운영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자금지원이나 판로확보도 후순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표 5-1> 유치기업 대상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운영자금 지원	14	22.58	13	20.97	8	12.9
기반시설 확충	19	30.65	11	17.74	6	9.68
전문인력 양성	14	22.58	16	25.81	13	20.97
산학연연계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5	8.06	6	9.68	7	11.29
이전기업 조기정착 지원(자금, 판로, 인력확보)	7	11.29	13	20.97	21	33.87
기업 홍보 및 중계	3	4.84	3	4.84	7	11.29

### 2. 유치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유치 혹은 이전기업의 경우 이전 후에 낯선 지역 내에서 경영상의 많은 애로사항을 경험하게 된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인력의 충원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맞춤형 기술교육사업, 취업박람회, 고용촉진훈련, 인턴사원제, 취업알선센터 등을 운영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전

문 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지역주민과 이전기업 간 상생협력방안 모색

기업은 도로의 혼잡이나 공해 혹은 소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인근 지역주민에게 야기하기 때문에 간혹 유치기업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초래한다.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의적인 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는 외부인과 외부기업이 배타적인 느낌을 갖지 않도록 외부자본과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자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친기업적 정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강법식·김덕모, 2006). 더불어, 유치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 4. 기업유치실적 관련 DB의 정확성 개선

충남도청의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부정확한 측면이 존재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도청의 유치 혹은 이전기업 목록에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도내로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전에 계획되었던 이전 시기는 실제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외지기업의 유치 후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현지토착화 되어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치 혹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DB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1. 연구결과의 요약

충청남도의 민선 4기 도정에서는 기업의 유치에 가장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를 통해 괄목할 만한 외적인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기업의 유치에 투자된 자원과 기업유치의 성과-즉, 유치된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치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분석모형에 따라 상이한 혼합된 결과를 나타내며,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는 유치기업이 이전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13~17명만큼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중격차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는 유치기업의 고용창출이 이전기업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전보조금의 규모는 모든 분석모형에서 고용창출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기업유치시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보다 본사가 함께 이전해 오는 경우 지역경제와의 연계가 보다 활발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

규모에 상관없이 유치기업은 이전 전에 비해 이전 후에 지역 내 업체와의 거래가 보다 빈번히 이뤄져 산업연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전기업에 비해 유치기업의 전략산업 비중이 높아 전략산업의 도내 군집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집적의 경제가 발생함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도내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에 해당하는 유치기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치기업의 연구개발, 수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활동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고용창출효과의 증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의 공

급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산학연 합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공장과 본사가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고, 산업연계 강화를 위해 도내 관련 업체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필요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전략산업육성이나 3농혁신과 같은 도의 정책에 관련된 기업의 선별적 유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전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재정인센티브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의 전환을 통해 이전기업과 함께 기존에 도내에 입지해 있는 기업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평성이 고려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유치기업의 지역 내 토착화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정책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 분석대상 기업의 범위와 분석자료

본 연구는 지난 5년간 충남으로 이전보조금을 받고 이전해 온 120여개의 유치기업 가운데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분석이 이뤄졌다. 하지만, 분석결과의 일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에 보다 많은 유치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고 고용이나 지방세 등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2) 지역 내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분석의 대상이 유치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산업연관 등에 있어서의 유치기업의 긍정적 효과를 추정하는데 한정되었다. 하지만, 지역 내 기존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이를 테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의 심화로 인한 기업 간 노동력 약탈(labor poaching)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법식 · 김덕모, 2006, “기업관계자가 본 광주 · 전남의 기업유치와 투자환경”, 국토연구 49, pp. 39-54
- 강병수, 1997, “미국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전략”, 북미주학연구(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제6집, pp. 99~123
- 강병주, 1999, “지방화시대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세계화 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1권 3호, pp. 73~88
- 권선주, 1997,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에 관한 검증”, 경제논집 제36권 3호, pp. 509~519
- 김양중, 2011,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분석 - 농공단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김채환, 1991, “분공장의 지역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천, 1987, “세원분포의 실태와 지역적 편중의 측정에 관한 소고”, 재정논집, 한국재정 · 공공경제학회
- 이민원, 2001, “지역경제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광주지역”, 국토, pp. 39~47
- 이영희, 2008, “기업유치와 지방세의 연계 강화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 201~220
- 진영환 외, 1989, “산업기지개방의 지역파급효과 분석”,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 진영환, 고주환, 1990, “공장입지에 따른 지방재정증대효과 분석”,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 최명희, 조계근, 변용환, 2006,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효과 - 하이트 맥주 홍천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pp. 101~125
- 황정현 외, 2010, “충남 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지 조성방안”,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 Combes, Pierre-Philippe & Duranton, Gilles, 2006, "Labour pooling, labour poaching,

- and spatial clustering,"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6(1), pp. 1-28
- Koenig, 2009, "Agglomeration and the export decisions of French firm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6, pp. 186-195
- Lee et al., 2010, "Marshall's Scale Economies and Jacobs' Externality in Korea: the Role of Age, Size and the Legal Form of Organisation of Establishments," *Urban Studies* 47(14), pp. 3131-3156
- Miller and Blair, 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Milward and Newman, 1989, "State Incentive Packages and the Industrial Location Decis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3(3), pp. 203-222
- Spindler and Forrester, 1993, "Economic Development Policy. Explaining Policy Preferences Among Competing Models," *Urban Affairs Quarterly* 29(1), pp. 28-53
- Thompson, 2002, "Cluster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nhanced Technology Transfer: Evidence from Hong Kong Garment Firms in China," *World Development*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임재영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이태호 연구원

전략연구 2011-09 ·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글쓴이 · 홍성호 · 신동호 · 임재영 · 김양중 · 이태호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1년 12월 31일 / 발행 · 2011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69(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79-3 93350

<http://www.cdi.re.kr>

©2011.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